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이념구조의 다차원성과 보수의 분화

: 2020년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박 정 은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6년 총선 이후 네 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패배한 원인이 보수 유권자 집단 내부의 이념적 분열에 있으며 그로 인한 보수 유권자의 분화가 단순한 이념성향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책이슈에 대한 태도, 즉 정책 선호(policy preference)로 구성되는 이념구조의 차이에 근거한 현상임을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2020년 총선에서 그 후신인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들과 2016년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이질적인 이념구조를 갖고 있었다. 전자를 기성 보수 유권자 집단, 후자를 분화된 보수 유권자 집단으로 정의한다면 기성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이념은 일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은 대북·안보 이슈의 차원과 경제적 이슈의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이념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은 서로 다른 정책이슈의 차원에서 상반되는 방향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북·통일 이슈에 있어서는 기성 보수 유권자 집단과 비슷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슈에서는 그보다 훨씬 진보적인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슬로건과 일치하는 정책 태도의 집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의미한 제3의 보수정당이 부재했던 2020년 총선의 상황에서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 결정을 내려야 했다면 이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정책이슈는 무엇인가?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유권자들이 이슈의 중요성(issue salience)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정책적 차원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차원에서 유권자 본인의 쟁점위치(issue position)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정당을 2020년 총선에서 대안으로서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즉 대북·안보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경우 분화된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을 지지했으며 그와 반대로 경제적 이슈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다.

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북·안보 이슈 차원과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의 정책 태도가 일관성이 있을 때, 즉 이념구조가 일차원적일 때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보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두 차원에서 정책 태도가 동일한 방향에 있지 않은 다차원적 이념구조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확률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지지할 확률보다 낮았다.

본 논문의 연구는 이러한 이념구조의 차이에 따른 보수 유권자의 분화가 정당과 유권자 간 연합 구도의 해체로 시작되는 재편성(realignment)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강한 결집력을 보였던 보수 유권자 집단 내부에서 분열이 가속화되는 원인은 결국 이념구조의 차원성에 있으며,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정책적 차원의 개수에 따라 투표 선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보수 유권자의 분화라는 현상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당체계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보수 유권자의 분열, 다차원적 이념구조, 이슈 태도, 정책 선호, 재편성, 요인분석

학 번 : 2018-21715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 7
제 3 절 논문의 구성 ····· 9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 11
제 1 절 정치이념의 구조와 이슈 태도 ····· 11
제 2 절 이념과 정당 지지의 관계 ····· 16

제 3 장 연구방법 ····· 19
제 1 절 연구가설 ····· 19
제 2 절 분석 자료 및 대상 ····· 24
제 3 절 주요 변수 설정 ····· 25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 25
2. 변수의 조작화 ····· 25
제 4 절 분석 방법 및 통계 모형 ····· 29

제 4 장 경험적 분석 ····· 31
제 1 절 유권자들의 투표 이동 경로 ····· 31
제 2 절 보수 유권자들의 이념구조 ····· 36
제 3 절 다차원적 이념구조와 투표 선택 ····· 48

제 5 장 결론 ····· 57
제 1 절 분석결과 요약 ····· 57

제 2 절 연구의 함의 ····· 60

참고문헌 ····· 62
부록 ····· 68
Abstract ····· 71

표 목 차

[표 1] 변수의 조작화 방식 ····· 27
[표 2] 로지스틱 회귀모형식 ····· 30
[표 3] 2016년과 2020년의 지지 정당 선택 ····· 31
[표 4]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의 이념구조 ····· 37
[표 5]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의 이념구조 ····· 38
[표 6] 2020 총선 투표 정당에 따른 집단별 쟁점위치 ····· 46
[표 7]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 및 정당 호감도 ····· 47
[표 8] 호스머-래머쇼(HL) 통계량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 ·· 49
[표 9]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념구조의 차원성에 따른 투표 선택 ····· 51

그 림 목 차

[그림 1] 역대 선거별 보수 정당의 득표율 추이 ····· 2
[그림 2] 2016년 총선: 지지정당별 정책 태도의 일관성 ··· 4
[그림 3] 2016-2020년 지지 정당별 정책 선호 1: 사회적 이슈 ····· 33
[그림 4] 2016-2020년 지지 정당별 정책 선호 2: 경제적 이슈 ····· 34
[그림 5] 2016-2020년 지지 정당별 정책 선호 3: 대북·안보 이슈 ····· 34
[그림 6] 보수 유권자 그룹 간 정책 태도의 분포 비교 ····· 40
[그림 7] 보수 유권자 그룹별 정책 태도의 분포 ····· 42

[그림 8] 분화된 유권자들의 2020년 비례대표 정당 선택과 이슈 차원 ····· 43
[그림 9]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ROC 곡선 ····· 50
[그림 10] 이념구조 차원성 변수의 한계효과와 신뢰구간 ·· 53
[그림 11] 이념구조에 따른 미래통합당 투표 확률: 성별 비교 ····· 56

제 1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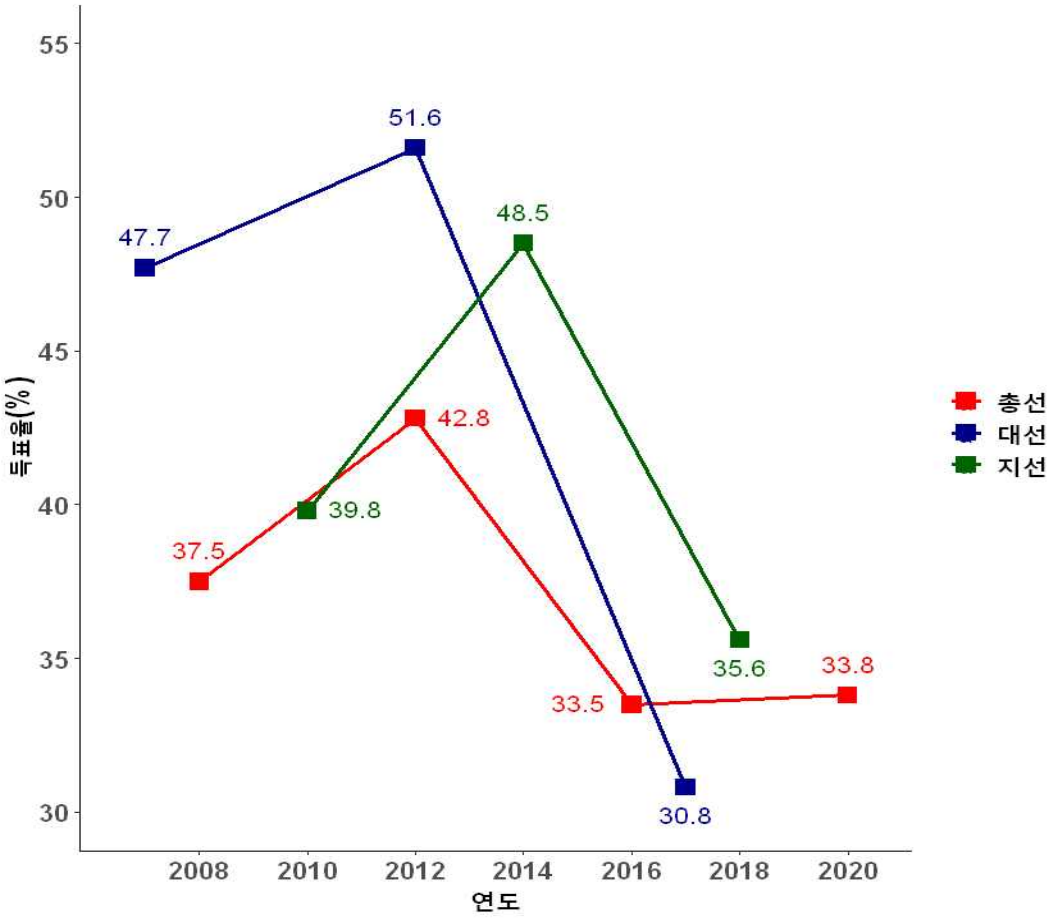
제 1 절 문제제기

2020년 국회의원선거는 앞선 세 차례의 선거, 즉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그리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보수 정당의 약화 및 보수 유권자들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화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한국의 선거결과를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관용구로 자리 잡은 이래로 2020년 총선에서 보수 정당은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100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경향신문 20/4/16).[1] 심지어 거대 양당의 지지 세력이 결집한 결과, 2000년대 들어서 치러진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66.2%)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역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참패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렇듯 2020년 총선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듯이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나타난 보수 세력의 약화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의 선거에 걸쳐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다시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정당체계의 재편성(realignment) 논의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적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당이라는 유의미한 제3정당이 존재했으며 다당제가 형성되었던 2016년 총선과 달리 2020년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들로 인해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1) 임지선. 2020.4.16. "이런 보수는 처음"…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통합당. 경향신문.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161143001 (검색일자 2020.4.16.)

지속적으로 이탈함에 따라 보수 정당과 유권자들 간 지지 연합은 계속 와해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보수 세력의 최전성기로 평가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나타낸 것이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득표율은 각각 유승민과 홍준표의 득표율,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득표율을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2016년 총선 이후로 보수 정당의 득표율이 30%대로 내려앉게 되었고 심지어 2개의 정당으로 분열한 뒤에는 두 번의 선거(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홍준표)과 바른미래당(유승민)의 득표율을 합쳐도 2016년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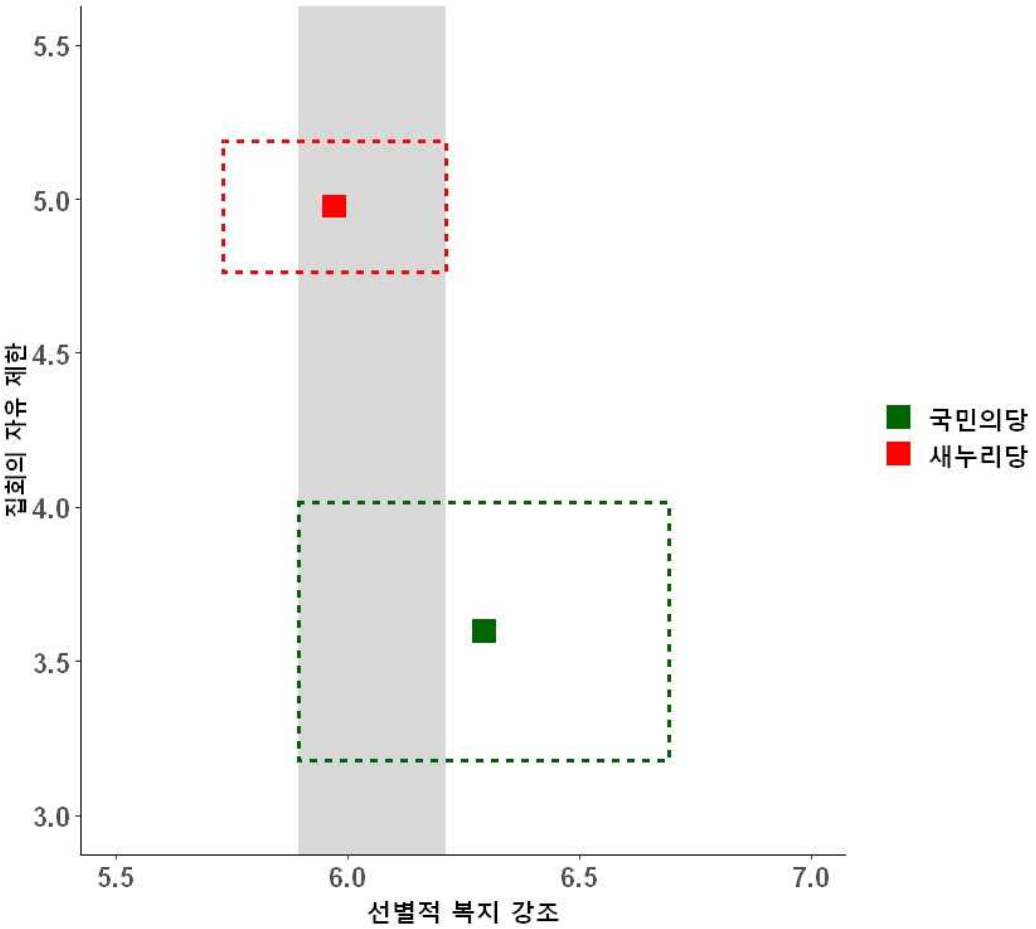
<그림 1> 역대 선거별 보수 정당의 득표율 추이

사실 그동안 2016년 총선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보수 유권자들의 분화는 꽤나 뚜렷하게 관찰되어 왔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국민의당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2017년 대선을 거치며 기성 보수정당의 지지자들과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대표되는 제3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 이념적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이내영・고승연 2016; 장승진 2016).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지지자들과 유승민 지지자들 간 유의미한 정책 태도의 차이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2년 당시에도 보수 유권자 집단은 정치이념과 이슈 태도(issue attitude)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유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나타난 보수 유권자의 분화가 그들 내부의 이념성향 및 정책선호에서의 차이와 긴밀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강원택 2017; 강원택・성예진 2018; 송진미 2019).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대선에서 유력후보로 등장하기 전부터 안철수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며 유승민 역시 자신의 이념적 방향성이 안철수의 슬로건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2] 만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처럼 제3의 보수정당이 표방했던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와 같이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책 태도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있었다면 이들은 기성 보수정당의 지지자들과 이념적, 정책적 위치가 다를 뿐 아니라 정책 태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래의 <그림 2>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공동으로 조사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총선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이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 일관된 이슈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 정책이슈에 대한 선호[3]는 매우 반대(0점)에서 매우 찬성(10점)에 이르는 11점 척도로

2) 전슬기. 2017.2.27. 유승민 "안철수와 '안보는 보수・경제는 진보' 철학은 비슷". 조선비즈.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2381.html (검색일자 2020.1.24.)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정책 태도가 보수적이도록 리코딩(recoding)하였다. 10가지 정책이슈 문항들 중 경제적 이슈 차원과 사회적 이슈 차원에서 대표적인 정책이슈 2가지를 선별하여 두 지지자 집단의 정책 태도 평균을 나타내보았다. 또한 집단별 정책 태도 평균의 신뢰구간도 함께 표시하였다.



<그림 2> 2016년 총선: 지지 정당별 정책 태도의 일관성

3) 여기서 사용된 문항은 한미 동맹관계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대북지원 유지, 집회의 자유 보장, 사형제 폐지, 평준화보다 경쟁력을 강조하는 교육, 경제성장보다는 복지 강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해결, 고소득자 증세, 선별적 복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다.

<그림 2>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자 집단은 선별적 복지와 집회의 자유 제한에 대해 모두 보수적 태도를 보인 반면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은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선별적 복지 이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경제적 이슈에서는 보수적, 사회적 이슈에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은 새누리당 지지자 집단에 비해 일관되지 않은 정책선호를 갖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신뢰구간을 통해 확인해봤을 때 선별적 복지 이슈에서만 두 집단 평균의 신뢰구간이 중첩되므로 사회적 이슈 차원과 대조적으로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는 두 집단 간에 태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의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상반된 방향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 이슈에서 두 집단의 신뢰구간이 중첩되기는 하지만 2016년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신 국민의당을 지지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이 새누리당 지지자 집단보다 경제적 이슈에 대한 정책 태도가 더 보수적이라는 사실은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 안에 기존의 보수 정당으로부터 이탈한 유권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모든 정책 태도 문항들이 하나의 개념(즉 여기서는 하나의 정책적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해보았을 때 새누리당 지지자 집단은 0.7265,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은 0.5175로 계산되었다. 보통 0.7 이상일 때 문항들 간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기존의 보수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정책 태도가 하나의 차원으로 요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2016년 총선을 거치며 나타나기 시작한 보수 정당의 약화는 한때 결집되어 있던 보수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분열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며 결국 이는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념 ‘구조(structure)’의 차이에 근거한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바른미래당의 주축이었던 유승민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미래통합당으로 흡수되고 이후 21대 총선이 양당 경쟁구도로 수렴되어 버리면서 이전에 제3정당을 지지했던 보수 유권자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되었다. 따라서 2020년 총선에서 양당의 당파적 유권자들(partisan voters)에 비해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은 일차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일관적인 이들의 정책선호에 따라 투표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은 여전히 2020년 총선에서도 기성 보수정당의 지지자들과 달리 일관되지 않은 정책 태도를 갖고 있는 고유한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만약 겉보기에 상반된 정책 태도들의 집합을 갖는 보수 유권자들이 유의미한 제3의 보수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결정을 내려야 했다면 이들의 정치적 선택을 결정지은 정책이슈는 무엇인가?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떠한 정책이슈 차원에 따라 달라졌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질문들로부터 출발하여 전통적인 보수정당의 지지자 집단과 분화된 보수 유권자 집단 사이의 분열이 단순한 이념적 위치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정책 태도들로 구성된 이념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내고, 2020년 총선에서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의 이념 구조가 이들의 정치적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2016년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수 유권자의 분화라는 현상을 보수 유권자 집단 내부의 이념적 분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념적 분열이란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지는 기성 보수정당 지지자 집단과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지는 제3의 보수정당 지지자 집단 간에 이념성향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책이슈에 대한 태도, 즉 정책 선호(policy preference)로 구성되는 이념구조의 차이까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앞서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성 보수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분화된 보수 유권자 집단은 정책이슈 차원에 따라 정책 태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책이슈들에 대해 일관되게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기성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이념구조는 일차원적인 반면 분화된 보수 유권자 집단의 이념구조는 보다 다차원적이다. 이렇게 상이한 이념구조는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균열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일부 보수 유권자들이 안보·대북 이슈에서는 미래통합당 계열의 보수 정당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경제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전자는 모든 정책적 차원에서 보수적인 쟁점위치(issue position)에 있는 전통적인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 힘들 수 있다. 게다가 그러한 경제적 이슈, 사회적 이슈 차원이 안보·대북 이슈 차원보다 전자의 지지정당 선택에 훨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은 기성 보수정당으로부터 지지를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20년 총선에서도 뚜렷하게 재확인된 보수 정당과 유권자 간 연합 구도의 해체는 이념구조가 서로 다른 '전통적 안보 보수'와 '합리적 시장경제 보수'의 결합이 깨지면서 나타난 장기적,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4]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련의 정책 태도들로 구성되는 정치이념 구조의 차이에 의해 보수 유권자들의 분화가 촉발되

었으며 의미 있는 제3의 보수정당이 없었던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그러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재편성(realignment)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서 보수 유권자의 분화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재편성 논의가 특정 시점의 선거 결과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투표 결정요인으로서 지역주의, 이념, 세대 등 다양한 균열(cleavages)들 중 하나가 이전 선거와 비교했을 때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만 해도 재편성이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는 식으로 주장이 전개되었다는 한계를(김일영 2004; 이정진 2007; 이준한・임경훈 2004) 극복하고자 한다. 비록 보수 유권자의 분화라는 장기적인 현상이 이념적 재편성으로 귀결될지 그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편성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점진적이면서도 중대한 변화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차원적인 정책 태도를 가진 보수 유권자들이 2020년 총선에서 불가피하게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치적 선택이 그들의 다차원적인 이념 구조가 낳은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재편성의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들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설령 이번 선거로 인해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의 이념구조가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유효한 변수라는 점이 변함없다면 그러한 정당체계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동에 불과한 반면 보수 정당의 약화로 표출되는 보수 유권자의 분화는 훨씬 더 장기적인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박원호. 2020.4.17. 코로나 속 국가의 재발견, 그게 수퍼여당 만들었다. 중앙일보.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756396 (검색일자 2020.4.18.)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장에서는 2020년 총선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보수 유권자 집단의 분열이 이미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가시화되고 있었던 연구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야 하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확인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태도들로 요약되는 이념구조의 차원성과 그러한 이념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선택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검토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이념구조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투표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인 논의를 모색해본다.

세 번째 장에서는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념구조의 차이를 확인하고 특히 2020년 총선 이전에 제3의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이념구조가 2020년 총선에서의 지지 정당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설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설의 경험적 검증을 위해 사용할 자료와 변수들을 소개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포함한 핵심변수들을 어떻게 조작화 하였는지 설명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분석모형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서 가설들의 채택 여부와 함께 그러한 결과를 심층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보수 유권자들은 서로 다른 이념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념구조와 지지 정당의 선택 간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본 논문에서 규명된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의 이념구조와 정치적 선택 간 관계가 시사하는 함의를 서술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향후 남겨진 과제를 설명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사용할 자료는 시사IN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인식 조사」이다. 해당 조

사는 2020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방식으로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정치이념의 구조와 이슈 태도

정치이념에 대한 정의는 논쟁적일 정도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념이란 '서로 제한되어 있거나 기능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요인들로 구성된 의식과 태도의 배열'로 정의될 수 있다(Converse 1964).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도의 일관성 혹은 태도가 제한(constraint)되는 수준이다. 컨버스에 따르면 신념체계(belief systems)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경제 정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유권자라면 다른 영역의 정책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 유권자는 좌-우(left-right) 또는 자유주의-보수주의(liberalism-conservatism) 같은 일차원적인 이념적 연속체(ideological continuum)를 따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다. 이 때 유권자의 정치이념은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이슈 태도 혹은 정책 선호를 요약한 지표(indicator)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컨버스의 논의를 계승한 후속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이념은 일반적으로 일차원적(unidimensional)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념구조를 가진 유권자들은 주로 정치적 정보에 대한 인식적 수준이 높은 정치적으로 세련된(politically sophisticated) 유권자이다(Feldman 1988; Stimson 1975; Wyckoff 1980). 이들은 자신의 이념성향에 기반하여 정책적 입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차원적인 이념구조 하에서는 좌-우 또는 자유주의-보수주의 차원과 이슈 태도 간 상관관계가 크다. 따라서 유권자가 단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되는 이념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는 후보자와의 이념적 거리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정책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다운스(Downs 1957)의 근접성 모델(proximity model)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베트남 전쟁, 낙태, 대마초 합법화 등의 사회적 이슈들이 부상하면서 일차원적 이념구조와 그에 바탕을 둔 합리적 선택으로서 이슈투표(policy voting)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보수주의 차원을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다시 나누어 이념구조를 2가지 차원에 따라 조직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이 등장하면서 이념의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구조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Conover & Feldman 1981; Carsey and Layman 2006; Treier and Hillygus 2009). 만약 유권자들이 투표 선택을 위해 사용하는 차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면 이념이 제한된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관된 신념체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유권자가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정부의 지출 확대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컨버스의 논의에 비추어봤을 때 그 신념체계는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이념적이지만, 반대로 다차원적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신념체계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구조(structure)와 의미(content)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가진 유권자가 반드시 비합리적인 유권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태도들이 응집력 있는 신념체계를 구축한다면 정치이념은 투사(projection) 효과나 설득(persuasion)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당일체감과는 별개로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isberg & Rusk 1970).

이념구조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차원은 좌-우 차원과 자유주의-권위주의(libertarian-authoritarian) 차원이다. 좌-우 차원은 정치이념을 설명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차원으로 주로 경제적, 물질적 가치의 배분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되어 있

다(강원택 2010). 따라서 소득 재분배, 사회복지 확대, 부자 증세,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보조 등과 같은 이슈들이 좌-우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자유주의-권위주의의 차원은 개인의 자유 보호 대 기성 질서의 수호 사이의 갈등과 맞닿아 있다. 집회 및 출판의 자유나 국가의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옹호, 법률의 준수와 처벌, 동성애, 낙태, 사형제는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의 차원을 대표하는 이슈들이다. 에반스와 그의 동료들은 좌-우 척도에 자유주의-권위주의 척도를 추가했을 때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는 모델의 설명력이 높아졌으며, 특히 자유주의-권위주의 차원을 통해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전통 보수정당인 보수당과 중도 보수 성향의 자유당 중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Evans, Heath & Lalljee 1994). 이념적으로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 위치한 자유당을 보수 유권자가 선택할 경우 자유주의-권위주의 차원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플레시먼은 2차 요인분석(second-order factor analysis)을 통해 소득 격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지원, 복지를 위한 정부 지출 확대와 같은 경제 이슈들을 대표하는 경제적 보수주의와 낙태, 동성애, 인종차별 이슈를 포함하는 개인적 자유 이 2가지 차원으로 이념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경제적 보수주의와 개인적 자유주의의 상관관계는 낮았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이 자유주의-보수주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따라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가정을 반박한다(Fleishman 1988).

그렇다면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이념은 몇 가지의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는가? 해외의 연구사례와 유사하게 국내 연구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주요한 이슈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념구조를 다르게 정의해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은 대북 지원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통일・안보 이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거나 혹은 진보-보수의 일차원 상에서 충분히 설명되는 것으로 여겨졌다(강원택 2003; 김무경・이갑윤 2005; 김주찬・윤성이

2003). 하지만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념은 지역주의와 비등한 수준으로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후 세종시 수도 이전, 한미FTA와 미국산 소고기 파동 등의 이슈들이 등장했던 2000년대 후반을 지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란, 2012년 대선에서의 경제민주화 이슈 등 여러 영역의 정책이슈들이 부상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이념투표를 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과는 대조적으로 보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구조 속에서 이념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강원택 2005; 박경미 외 2012; 박원호 2012; 이현출 2005; 최효노 2018; 한정훈 2016; 현재호 2008).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이념적 차원은 대북 지원, 한미 동맹,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이슈와 관련된 국방・안보(또는 반공 이데올로기 지지/반대)의 차원과 복지정책의 확대, 기업 규제, 민영화 이슈 등과 연결되는 경제적 차원, 그리고 집회나 표현의 자유 보장, 사형제 폐지, 소수자 차별 금지 등의 이슈를 포함하는 자유주의-권위주의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다차원적 이념구조와 관련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자유주의-권위주의 차원이다. 2000년대 들어서 이념적 갈등을 형성해왔던 경제적 차원, 대북/안보 차원과 달리 자유주의-권위주의 차원은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에 따른 지지 정당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박원호(2012)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대북・안보 차원과 경제적 차원, 그리고 민주-반민주의 현대적 변주라 할 수 있는 국가의 통치권-시민권 차원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면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는 병역거부,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의 차원과 경제이슈의 차원이 음(-)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모든 유권자들이 모든 이념적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암시한다. 한편 한정훈(2016)의 연

구 역시 유권자들의 정치이념이 경제적 이슈, 사회적 이슈, 대북·안보 이슈 등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그 중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특히 경제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분석은 통일에 대한 유권자의 입장이 대북·안보 이슈에 대한 태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이슈들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치이념이 북한 문제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오래된 통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정치이념 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념구조가 어떤 정책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권자 집단이 다차원적인 정책선호를 갖고 있는지, 이념구조의 차원성(dimensionality)과 정당 지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체 유권자들의 이념구조가 몇 개의 정책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규명하는 선행 연구들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미래통합당 지지자 집단과 분화된 보수 유권자 집단의 이념구조를 비교해보는 것이 불가능하며 두 집단의 이념구조 차이에 따른 이념적 분열과 재편성이라는 동적인 정치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제 2 절 이념과 정당 지지의 관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이념의 구조, 즉 차원성을 '정책이슈에 대한 태도들로 요약되는 이슈 차원의 수(number of dimensions)'로 정의한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각각의 이슈 차원들에 기반하여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가? 정책 태도들로 구성되는 이념에 따른 투표 선택을 설명해주는 모형들 중 대표적인 것은 다운스(Downs 1957)의 근접성 모델이다. 다운스는 좌-우 이념적 스펙트럼 위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쟁점위치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념적 경쟁 공간 내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책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정당과의 정책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투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접성 모델에 따른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유권자가 정책이슈에 대해 명확한 선호를 갖고 있으며 그 이슈를 중요한 이슈(salient issue)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조건은 유권자가 봤을 때 특정 정책이슈에 대한 정당들의 쟁점위치가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송진미・박원호 2016).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2020년 총선은 다운스의 정책이슈 투표 모형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번 총선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가 다른 정책・선거이슈들을 잠식해버리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재정 지출 이슈, 재난지원금을 수령 받는 대상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 논란, 이태원발(發) 집단감염과 함께 불거진 성소수자 혐오 문제 등 이전 선거들에서 부각되었던 이슈들과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뿐이지 결국 경제적, 사회적 이슈 차원의 범주에 분류될 수 있는 이슈들이 존재했다. 이런 이슈들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례 위성정당들의 등장으로 인해 양당 경쟁 구도가 뚜

렷했던 선거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두 정당의 쟁점위치가 명료하게 구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의 이념 투표를 설명하기 위해 근접성 모델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운스의 공간 모델(spatial model)은 일차원적인 스펙트럼 상에서의 이념적 경쟁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다차원적 이념구조를 가진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 결정을 조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이슈 차원마다 쟁점위치가 크게 다를 경우 유권자가 모든 쟁점위치들을 고려하여 정당과의 정책 거리를 계산하는지 혹은 그 중 특정한 정책이슈 차원에서의 쟁점위치만 선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이념구조와 정당 지지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권자가 복수의 이슈 차원들 중 어떤 것을 더 현저한(salient) 이슈 차원으로 보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Bakker, Jolly, and Polk 2018; Hong 2015). 베이커와 그의 동료들은 유권자들이 전통적인 좌-우 차원과 함께 EU 통합, 이민 이슈의 차원에 근거하여 기존 정당을 계속 지지할지 또는 다른 정당으로 이탈할지를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세 가지 이슈 차원에서 유권자 본인과 정당 간 정책적 입장의 거리가 멀수록 지지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권자들이 특정 이슈 차원을 중요한 이슈로 간주할수록 그 이슈에 대해 정당과의 정책 거리가 멀 경우 더 이상 기존 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이념이 2개 이상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중 유권자가 현저한 이슈로 생각하는 차원 상에서 근접성 모델에 따라 지지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프코프리디 외(Lefkofridi, Wagner, and Willmann 2014)의 분석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좌파이면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은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두 차원에서의 정책 태도를 모두 대표해주는 정당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

슈 차원을 기준으로 지지할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 민영화, 소득 재분배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슈를 이민자 수용, 법과 질서 강조와 같은 사회적 이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유권자는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이슈의 중요성(issue salience)을 바탕으로 근접성 모델에 근거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슈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비일관적인 정책 선호, 즉 다차원적인 이념구조가 2020년 총선에서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여러 차원들 중 어떤 이슈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따라 지지 정당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3의 보수정당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양당제가 강제되는 제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이 그들의 다차원적 이념구조를 바탕으로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유권자 수준에서는 2016년 총선을 통해 표출된 다당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가설

본 연구는 2016년 총선 이후 2020년 총선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수 정당의 쇠락과 그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보수 유권자들의 분화가 이른바 국가주의적 보수와 시장주의적 보수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던 강력한 보수 유권자 집단이 와해된 결과라는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특히 후자, 즉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이념이 이념구조의 측면에서 전자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유권자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 다차원적인 정책 태도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여전히 2020년 총선에서도 발견되는지, 2016년 총선과 달리 제3정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 만일 불가피하게 거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러한 투표 결정이 여러 정책 차원들 중 어떤 차원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설령 이번 총선과 같이 양당제로 되돌아가려는 제도적 관성이 존재하더라도 양당체계로는 대표되지 않는 보수 유권자 집단이 그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으며 결국 이런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이 이념적 재편성을 완성시킬 가장 핵심적인 열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제3정당이었던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과 이념적 위치뿐만 아니라 정책 선호로 구성되는 이념구조 자체가 다를 것이다. 즉 일관되게 모든 정책 영역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성 보수정당의 지지자들과 달리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보수 유권자 집단 내에서 합의이슈(valence issue)나 다름없는 대북·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는 큰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와 지출 확대를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에 가해지는 국가의 간섭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적(libertarian)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령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지지자들에 비해 유승민 지지자들이 성장보다는 복지를 더 강조하는 반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강경 기조를 선호하는 이슈 태도를 보였다거나, 2012년 대선-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홍준표를 지지한 유권자들과 박근혜-유승민/안철수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정책 태도를 비교했을 때 후자의 경우 대북・안보 이슈에 대해서 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전자에 비해 확연하게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강원택 2017; 송진미 2019) 이러한 가설에 설득력을 더한다.

<가설 1-a.> 2016년 총선-2020년 총선에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대북・안보 이슈와 경제적 이슈 차원 모두에서 보수적인 정책 태도를 보인다.

<가설 1-b.>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대북・안보 이슈 차원에서는 보수적이지만,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는 진보적인 정책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면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이 그들을 가장 잘 대표해줄 제3의 보수 정당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양당 중 하나를 지지해야 했다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변수는 무엇인가? 그동안 다수의 연구들이 유권자들이 특정 이슈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그 이슈에 대한 정책 태도가 투표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Brody and Page 1972; Lavine et al. 1996; Krosnick 1990; Giger and Lefkofridi 2014). 따라서 다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갖고

있는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대북·안보 이슈 차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강한 국가'의 유산을 계승하여 국가주의적 보수를 지향하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했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경제적 이슈 차원을 보다 현저한 이슈로 간주할 경우 자유주의적 성향이 훨씬 강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 때 2016년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이 완전히 거대 양당으로 양분되기보다는 그 중 일부는 2016년 총선에서의 국민의당과 연속성이 있는 정당인 국민의당을 2020년 총선에서도 지지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2016년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 이번 총선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총선에서 양당 대신 국민의당을 지지한 보수 유권자들이라면 설령 양당 대결구도로 귀결되는 선거였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미래통합당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a.>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 중 경제적 이슈보다 대북·안보 이슈를 더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것이다.

<가설 2-b.>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 중 대북·안보 이슈보다 경제적 이슈를 더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을 지지할 것이다.

한편 다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가진 보수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슈를 기준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쟁점위치에 있는 정당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20년 총선에서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던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의 대안적 선택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6년 총

선 당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2020년 총선에서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 모두 미래통합당 계열의 보수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에 비해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가 훨씬 멀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두 유권자 집단 사이에는 특히 미래통합당에 대한 정당호감도(partisan affect)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정당호감도란 정당에 대해 장기적,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온 심리적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과는 달리 단기적인 이슈나 정세에 반응하는 감정적 태도를 의미한다(박원호・신화용 2014). 정당호감도 변수는 감정온도계(feeling thermometer)를 통해 측정되는데 특정 시점에서 유권자가 정당에 대해 느끼는 호감의 방향과 강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길정아・하상응 2019; 오현주 외 2014). 그러므로 아래의 두 가설들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했는가와 관계없이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은 이념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5] 모두에서 미래통합당과 유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3-a.>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2020년 총선에서 지지한 정당과 상관없이 2016년 총선-2020년 총선에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들보다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가 더 멀다고 느낄 것이다.

<가설 3-b.>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2020년 총선에서 지지한 정당과 상관없이 2016년 총선-2020년 총선에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들보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정당호감도가 더 낮을 것이다.

---

5) 장승진(2018)은 정당 호감도는 해당 정당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최근의 한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을 좌우하는 주요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 유용성이 보장된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보수 유권자 집단 내에서의 이러한 분열이 관찰되었다면 다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가진 유권자들과 일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가진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이들의 이념구조가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가설을 통해 2016년 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태도가 얼마나 제한(constraint)되어 있는가에 따라 2020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선택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4> 다차원적 이념구조를 가진 보수 유권자들은 일차원적 이념구조를 가진 보수 유권자들에 비해 미래통합당을 덜 지지할 것이다.

제 2 절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사IN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인식 조사」이다. 이 자료는 대북 및 안보·경제·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정책 선호, 각 정당들의 이념성향 평가, 정당별 호감도, 2016년 당시 지지했던 정당 등 앞서 소개한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책임 정도, 미래통합당과 태극기 집회 세력과의 관계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설문 문항이나 2020년 총선에서 투표 결정 요인으로 국정농단 심판, 비례 위성정당 논란 등의 선지를 포함시킨 설문 문항 역시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보수 유권자들의 이념적 분화라는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 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즉 2016년 총선-2020년 총선에서 각각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 동일한 두 선거에서 국민의당-미래통합당을 지지한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 1',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을 지지한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 2'로 분류된다.

제 3 절 주요 변수 설정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서 미래통합당 지지 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이다. 미래통합당 지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는 각각 1과 0으로 코딩하였다. 독립변수는 이념구조의 차원성이다. 이념구조의 차원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먼저 2016년에 새누리당 또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전체 보수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이슈들에 대한 태도 변수를 갖고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다. 그 결과 추출된 각 요인들에 적재되는 정책들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mean)을 응답자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이슈 요인에 포함되는 정책들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을 정책 선호 1, 대북・안보 이슈 요인에 해당되는 정책들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을 정책 선호 2 라고 정의했을 때 ㅣ정책 선호 1 - 정책 선호 2ㅣ가 0에 가까울수록 이념구조는 일차원적인 반면 0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질수록 서로 다른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책 태도 간에 차이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이념구조가 다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수의 조작화

먼저 가설 검증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의 조작화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이념성향과 정치이념 구조의 측정 방식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이념 연구에서 유권자의 이념성향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예를 들어 0점(매우 진보)에서 10점(매우 보수)로 구성된 이념 스펙트럼 상에서 응답자가 직접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표시하게 하는 자기평가

적(주관적) 이념성향(self-placement)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유권자의 정책 태도로 이념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이념성향은 여러 정책들에 대한 선호를 요약하는 신념체계로 가정된다.

그런데 이 2가지 방식을 통해 측정된 이념성향들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인지, 아니면 상호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각에선 주관적 이념성향은 유권자 본인의 정책 태도나 쟁점위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정책 태도와는 반대되는 방향의 정치이념을 갖는 사례가 발견된다고 주장한다(Conover and Feldman 1981; Letivin and Miller 1979; Ellis and Stimson 2009). 반면 개인의 이념성향은 정책 태도를 반영하는 이슈 지향적(issue-oriented)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복수의 정책이슈들에 대한 태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정치이념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Nie and Anderson 1974; Nie et al. 1976).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이념성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동안 다수의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이념이 일련의 정책 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이념성향을 측정했을 때 이념 변수의 유효성이 높은 수준에서 확보되었다(류재성 2013). 그리고 이념경쟁의 공간이 다차원적일 경우 주관적 이념성향 측정방식만으로는 유권자들의 정치이념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선호를 기반으로 측정되는 이념성향을 핵심 변수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한정훈 2016).

<표 1>은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변수들의 조작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가설 1-a와 가설 1-b, 가설 2-a와 가설 2-b를 검증할 때 필요한 변수는 정책 태도 변수이다. 정책 태도 변수의 유형은 2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대북 강경책, 복지 확대, 국방비 지출 증가 등 정책이슈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을 통해 1점(매우 반대)에서 5점(매우 찬성)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북・통일 이슈와 경제적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측정하는 이산형 변수

(binary variable)이다. 두 가지 유형의 정책 태도 변수는 모두 점수가 클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방향으로 리코딩되었다.

다음으로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와 정당호감도는 가설 3-a와 가설 3-b의 검증을 위해 요구되는 변수이다.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변수는 응답자가 자신의 이념을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이념성향 점수와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평가하여 매겨진 정당 이념성향 점수 간 차이의 절댓값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정당과 본인의 이념적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느낄 때의 0점에서부터 가장 멀다고 느낄 때의 10점까지 범위를 갖게 된다. 정당호감도 변수는 응답자가 정당에 대해 호감을 느낄수록 점수가 커지도록 설정되었으며 0점(호감도 가장 낮음)에서 10점(호감도 가장 높음)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끝으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소개되었듯이 비례대표 투표에서의 지지 정당(미래통합당 지지 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이슈 차원에서 구한 정책 태도들의 평균값을 정책 선호 변수라고 했을 때 정책 선호들 간 차이의 절댓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념구조의 차원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통제변수로는 정당일체감과 주관적 이념성향을 포함시켰다. 특히 정책·이념투표를 크게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정당일체감 변수를 모델에 넣어봄으로써 설득 및 투사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채택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역시 통제변수로서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1> 변수의 조작화 방식

변수명	조작화 내용
정책 태도	유형 1) 매우 반대=1, 반대=2, 찬성도 반대도 아님=3, 찬성=4, 매우 찬성=5 유형 2) 반대=0, 찬성=1

정책 선호	정책이슈 차원에 해당하는 이슈들에 대한 정책 태도의 평균값
정당호감도	가장 낮은 호감도=0, 가장 높은 호감도=10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	가장 가까운 이념적 거리=0, 가장 먼 이념적 거리=10
지지 정당	미래통합당 지지=1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0
이념구조의 차원성	| 정책 선호 1 - 정책 선호 2 |
이념성향	보수, 중도, 진보(더미변수)
정당일체감	미래통합당=1, 더불어민주당=2, 국민의당=3, 그 외 정당=4
연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성별	남성=1, 여성=0
소득	200만원 미만=1, 200~300만원=2, 300~400만원=3, 400~500만원=4, 500만원 이상=5
학력	중졸 이하=1, 고졸=2, 대졸=3, 대학원 이상=4
거주 지역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더미변수)

제 4 절 분석 방법 및 통계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이질적인 이념구조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2020년 총선에서의 투표 결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즉 단순한 보수-진보의 1차원적인 이념 스펙트럼 상에서는 오른쪽 위치에 군집해있는 유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을 기점으로 이들 사이에 정치적 선택이 달라지는 분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결국 서로 다른 차원으로 조직된 이념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인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우선 2016년-2020년에 각각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과 2016년에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으로 나눈 뒤 정책 태도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해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과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 내에서 정책 태도들이 각각 몇 개의 정책이슈 요인으로 요약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그룹 사이에 요인의 개수가 다르다는 결과를 얻었다면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기반으로 2016년 국민의당 지지자 그룹 내에서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2020년 총선에서의 선택이 달라졌는지 알아볼 것이다.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은 2016 국민의당-2020 미래통합당 지지자 그룹과 2016 국민의당-2020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자 그룹으로 다시 세분화한다. 여기서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정책 차원 중 어떤 차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제시되는 각 정책 태도 변수들의 인자 적재량(factor loadings)을 응답자들의 정책 태도들에 곱해준다(Kim 2018). 예를 들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경제적 차원에 정책 태도 변수 a와 b가 적재되고 대북·안보 차원에 정책 태도 변수 c와 d가 적재되었다면 경제적 차원 상에서의 쟁점위치는 [(변수 a×변수 a의

CFAloading)+(변수 b×변수 b의 *CFAloading*)]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대북·안보 차원 상에서의 쟁점위치 역시 동일한 공식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각 정책 차원에서의 쟁점위치를 x축과 y축으로 설정하여 회귀선을 그려봄으로써 경제적 차원에서 쟁점위치의 변화가 대북·안보 차원에서의 쟁점위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상이한 투표 결정을 내린 두 하위 집단과 이슈의 중요성이 내포된 정책 태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과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 간 이념구조의 명확한 차이를 발견했다면 이들 전체 보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총선에서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데 이념구조의 차원성이 유의한 역할을 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념구조의 차이가 갖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통합당 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할 회귀분석의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로지스틱 회귀모형식

$$\ln\left(\frac{\pi_i}{1-\pi_i}\right) = \beta_0 + \beta_1 \text{이념구조의차원성}_i + \beta_2 \text{정당일체감}_i + \beta_3 \text{주관적이념성향}_i + \beta_4 \text{연령}_i + \beta_5 \text{성별}_i + \beta_6 \text{소득}_i + \beta_7 \text{학력}_i + \beta_8 \text{거주지역}_i$$

(단, $\pi_i = \Pr(Y=1)$)

제 4 장 경험적 분석

제 1 절 유권자들의 투표 이동 경로

분화된 유권자 그룹 대 전통 보수 유권자 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 사이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 선택이 어떤 경로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3>은 2016년과 2020년에 각 주요 정당들을 지지한 유권자 비율을 교차표(contingency table)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2016년과 2020년의 지지 정당 선택

		2020년 총선 지지 정당					
		미래 통합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 의당	정의당	민생당	전체
2016년 총선 지지 정당	새누리당	173 (70.04)	44 (17.81)	18 (7.29)	11 (4.45)	1 (0.40)	247
	더불어 민주당	16 (3.43)	394 (84.37)	22 (4.71)	29 (6.21)	6 (1.28)	467
	국민의당	6 (13.95)	15 (34.88)	19 (44.19)	2 (4.65)	1 (2.33)	43
	정의당	1 (1.61)	19 (30.65)	5 (8.06)	37 (59.68)	0 (0.00)	62
	전체	196 (23.93)	472 (57.63)	64 (7.81)	79 (9.65)	8 (0.98)	819
Pearson Chi-square=709.7015 Pr=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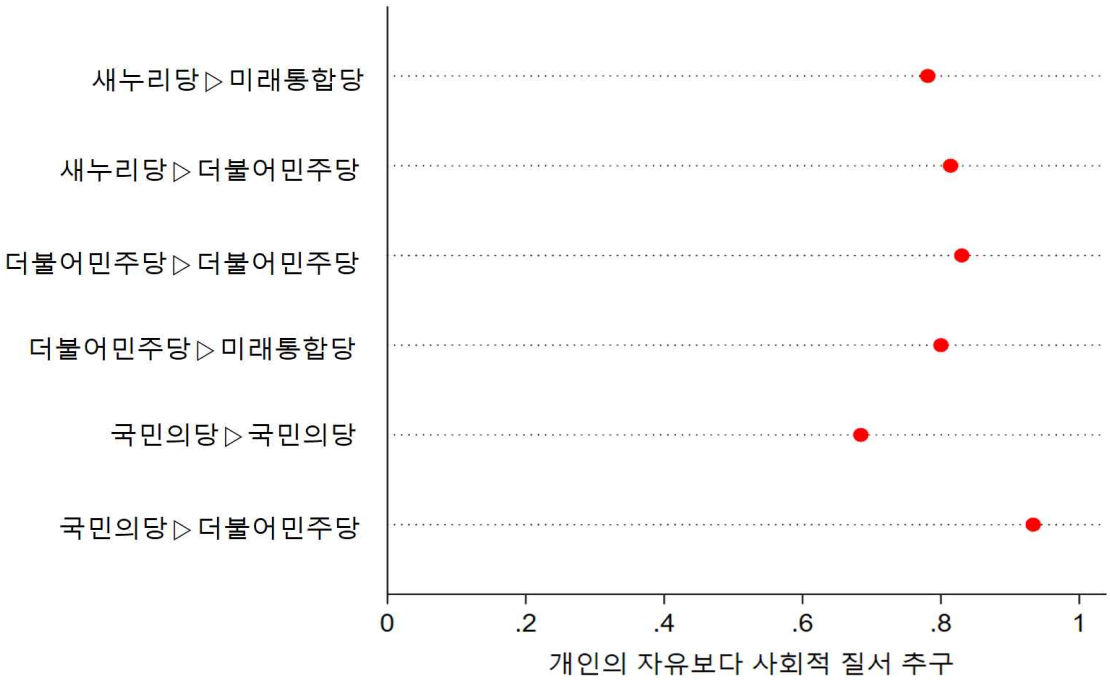
<표 3>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2016년 당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들 중 상당수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총선 직전에 기존의 국민의당을 계승했던 바른미래당이 분당됨에 따라 중도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사라지면서 1순위 선호 정당을 선택하기 어려워진 상황의 영향을 받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6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 내에서 2020년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성 보수정당은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에게서 대안으로서 선택받는 것에 실패한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이탈한 보수 유권자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분화된 유권자들과 기성 보수정당 사이의 거리가 이념적 측면에서든 정서적 측면에서든 2016년보다 2020년에 더욱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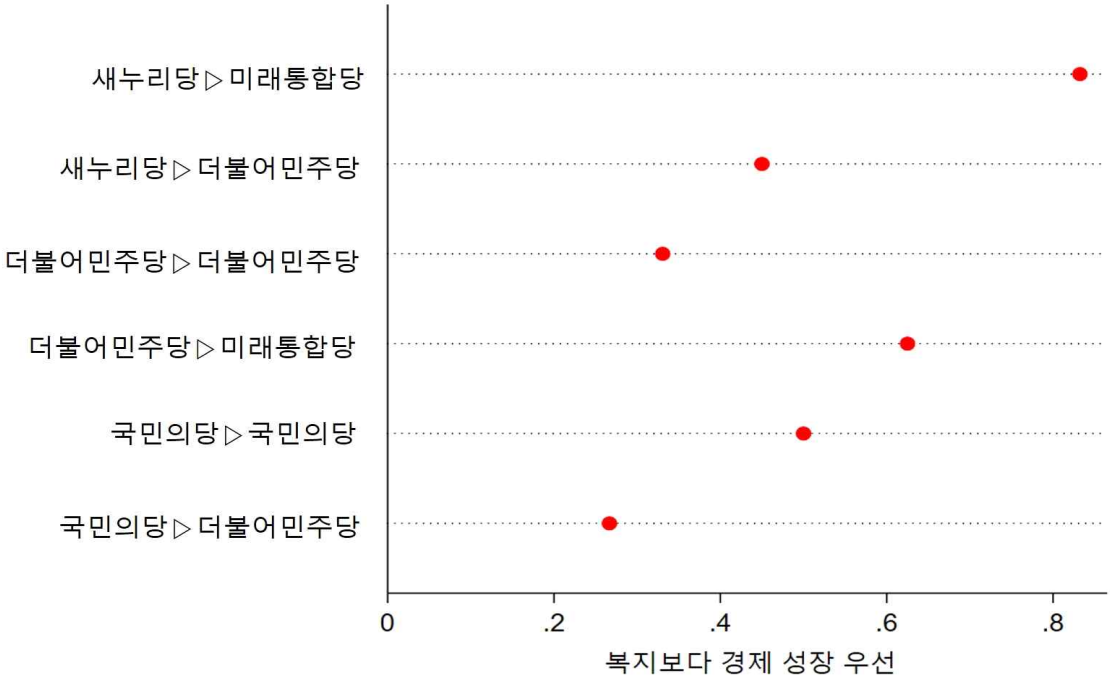
또한 2016년에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 가운데 2020년에도 일관되게 동일한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14% 정도 차이가 난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미래통합당은 2020년 총선에서 고정 지지자들을 묶어두는 데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반대편 진영으로 지지를 바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지지자 집단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집단의 비율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 이번 총선에서 상대 정당을 지지한 비율은 고작 3.43%에 불과한 반면 2016년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이탈한 유권자들의 비율은 17.81%나 된다. 이로 보아 미래통합당의 참패는 소위 '집토끼'들을 잡지 못한 데 더해 이미 2016년 당시 떨어져 나간 보수 유권자들과의 거리 확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예견된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6년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과 새누리당 지지자 집단은 2020년에도 여전히 대별 가능한 이질성을 갖고 있는가? 아래의 <그림 3>에서부터 <그림 5>는 2016년과 2020년에 지지한 정당들을 기준으로 하위 집단을 만들어 각 집단의 경제, 대북·안보, 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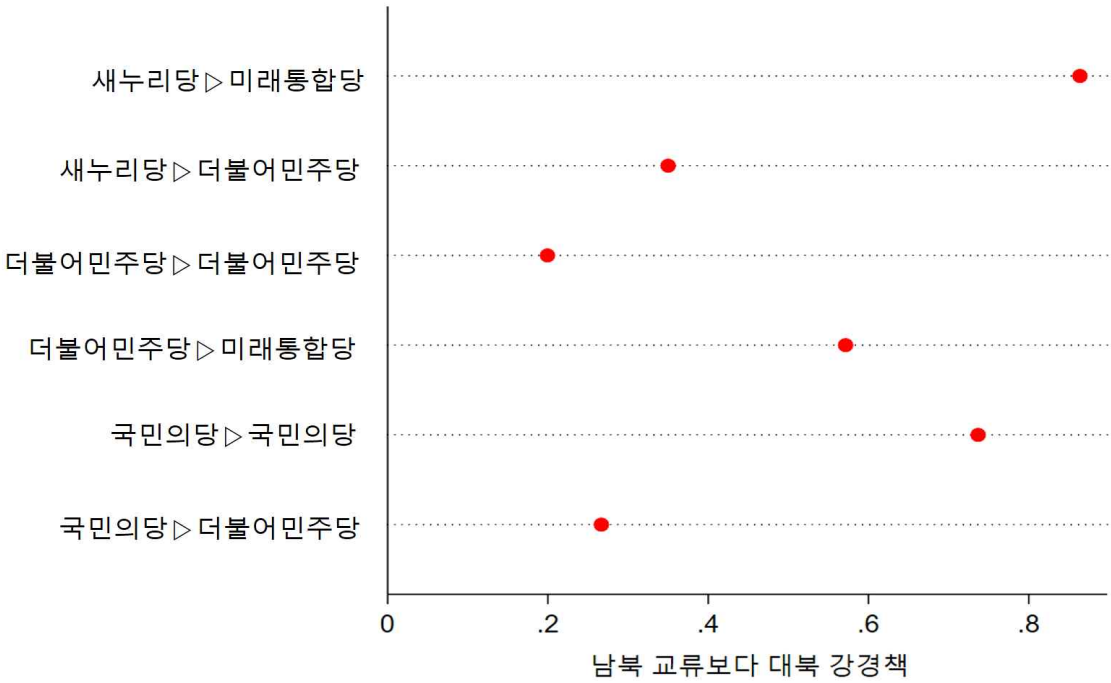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 2016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별로 2020년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두 정당을 선별하여 총 여섯 개의 하위 집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정책 태도 평균은 값이 커질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갖도록 코딩하였다. 먼저 <그림 3>을 보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사회적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2016년과 2020년 모두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법률이나 관습에 대한 순응, 질서 유지보다 개인의 자유를 훨씬 중요시하는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국민의당-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들에서 공통적으로 사회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가 나타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방역체계와 수칙들을 따라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자리 잡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권위주의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개인의 자유 대 법·질서 존중 이슈에 대한 국민의당-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의 태도가 여



<그림 3> 2016년-2020년 지지 정당별 정책 선호 1: 사회적 이슈



<그림 4> 2016년-2020년 지지 정당별 정책 선호 2: 경제적 이슈



<그림 5> 2016년-2020년 지지 정당별 정책 선호 3: 대북·안보 이슈

타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16년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기성 보수정당으로부터 이탈한 '보수 성향'의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슈 영역에 있어 보수적인 정책 선호를 고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4>와 <그림 5> 역시 2016년 새누리당 지지자 집단과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이 2020년 총선 시점에서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유권자 그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대북·안보 이슈와 경제적 이슈 모두 일관되게 보수적인 정책 선호를 보이는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집단과 달리, 국민의당-국민의당 집단은 경제적 이슈에 대해 보다 진보적이지만 통일 및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집단 다음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게다가 완전히 반대 진영으로 지지를 옮겨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집단과 비교하더라도 경제적 이슈 상에서 태도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바른미래당을 이끌었던 안철수와 유승민이 내세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슬로건과 일치하는 정책 태도, 즉 하나의 이념 차원으로 요약되지 않는 정책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자 집단과 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이 2020년 총선에서 일관된 정책 선호의 측면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면 다음으로 본격적인 요인분석을 통해 실제 두 집단 간 이념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제 2 절 보수 유권자들의 이념구조

보수 유권자들의 이념구조를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우선 2016년에 새누리당을 지지했으면서 동시에 2020년 총선 비례정당 투표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n=152$)으로, 2016년 국민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n=43$)으로 정의한다. 두 집단의 이념구조가 몇 개의 정책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와 <표 5>는 각각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과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의 정책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에 따르면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의 정책태도들은 대부분 1개의 요인에 적재되었다.[6] 일반적으로 인자 적재량이 0.4 이상일 때 해당 요인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편적 복지 변수와 국방비 예산 증대 변수의 인자 적재량이 0.4에 거의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13개의 정책 태도 변수들 중 11개의 변수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과 <그림 4>, <그림 5>에서 2016년과 2020년에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경제, 대북·안보, 사회 이슈에 대해 일관되게 강한 보수적 태도를 보인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 요인 1은 복지 확대를 위한 큰 정부, 대기업 규제 완화,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슈와 한미 동맹 강화, 대북 협상책 등과 연결되는 안보·통일 이슈들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 1은 '보수 대 진보'

6) 요인분석에서 적정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할 때 보통 2가지 기준 중 하나를 이용한다. 그 기준이란 첫째,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이거나 둘째, 요인이 자료를 설명하는 누적 분산 비율(cumulative)이 60%나 70% 이상일 때(O' Rourke, N. and L. Hatcher 2013, p.19)이다. 본 논문의 요인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적정 요인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에 대한 요인분석의 경우 누적 분산 비율 기준을 사용하여 적정 요인의 개수를 구한 것이다.

라는 이름의 이념적 차원으로 명명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의 정치이념은 1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한 이들의 선호는 크게 보수-진보의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의 이념구조는 2개 이상의 요인으로 설명

<표 4>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의 이념구조

변수	성분	공통성
	요인 1	
복지를 위한 지출 확대	**0.7202**	0.5186
빈부격차 해결책으로서 증세	**0.4212**	0.1774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 정책 추진	**0.7175**	0.5147
대북 강경책	**0.4477**	0.2004
국방비 예산 증대	0.3447	0.1188
북한과의 대화 협상	**0.5086**	0.2587
복지보다 성장 우선	**0.6098**	0.3718
대기업 규제 완화	**0.5519**	0.3046
남북 교류 협력	**0.5844**	0.3416
한미 동맹 강화	**0.6644**	0.4415
보편적 복지	0.3910	0.1583
사회적 질서 대 개인의 자유	-0.3099	0.0961
적폐 청산	0.1288	0.0166
고유값(eigenvalue)	3.51370	

*추출방법: 반복주요인법(iterated principal factor method)

<표 5>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의 이념구조

변수	성분			공통성
	요인 1	요인 2	요인 3	
복지를 위한 지출 확대	**0.9058**	0.0518	0.0248	0.8238
빈부격차 해결책으로서 증세	**0.6243**	0.1922	-0.2334	0.4811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 정책 추진	**0.9592**	0.1720	0.0986	0.9593
대북 강경책	-0.1215	**0.6533**	**-0.5056**	0.6972
국방비 예산 증대	0.2051	**0.4764**	**0.4818**	0.5011
북한과의 대화 협상	0.3265	**0.8588**	0.0190	0.8445
복지보다 성장 우선	**0.6869**	0.1398	0.0737	0.4967
대기업 규제 완화	**0.4633**	**0.5154**	0.0210	0.4808
남북 교류 협력	0.2665	**0.7652**	-0.1941	0.6942
한미 동맹	**0.5500**	**0.4388**	0.1933	0.5324
보편적 복지	-0.0441	-0.0093	**0.8913**	0.7965
사회적 질서 대 개인의 자유	-0.0489	-0.3855	-0.0527	0.1538
적폐 청산	**0.5629**	0.3301	**-0.4511**	0.6294
고유값(eigenvalue)	3.67492	2.78140	1.63453	

*추출방법: 반복주요인법(iterated principal factor method)

**회전방법: 베리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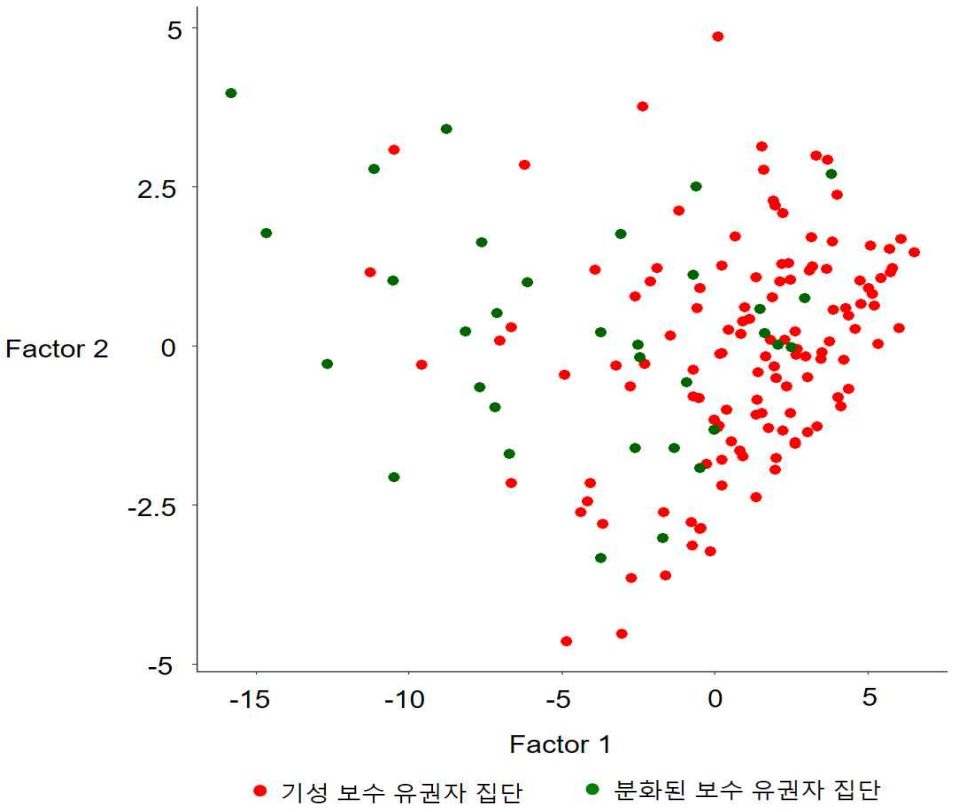
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인 1에는 주로 경제적 이슈들이 적재되어 있는 반면 요인 2는 대북·안보 이슈들과 상관관계가 높다. 따라서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과 대조적으로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의 이념은 복수의 차원, 즉 경제적 차원과 대북·안보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이슈에 대해 서로 상반된 방향의 정책 선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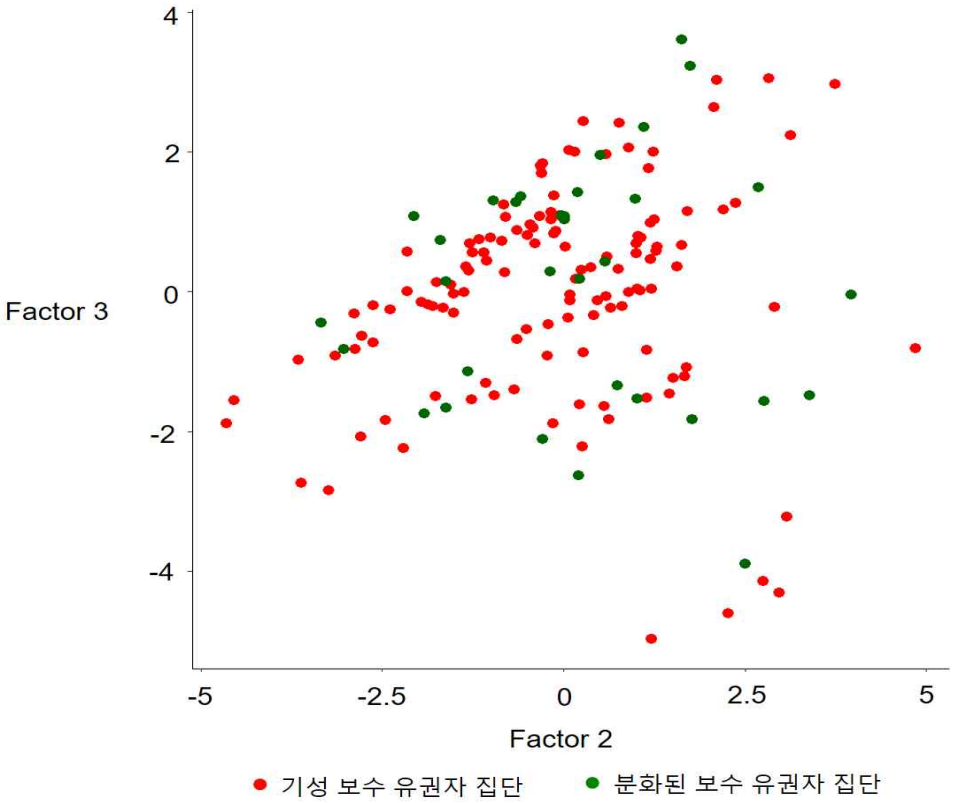
한편 요인 3에 적재된 일부 변수들이 다른 요인들에도 교차 적재(cross-loading)되어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요인 1과 요인 2를 해석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질서 대 개인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어떠한 요인에도 적재되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권위주의 척도와 연계되는 유사한 성격의 이슈들에 대한 정책 태도 문항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관련 문항의 개수가 늘어날 경우 사회적 이슈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인이 추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표 4>와 <표 5>의 분석결과는 두 개의 유권자 집단을 분리시켜 개별적으로 요인분석을 실행함으로써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각 집단 내 특성(이념구조의 차원)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화된 유권자들과 기성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이념구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을 하나의 유권자 집단으로 통합한 다음 정책 태도 변수들을 대상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7]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별도로 요인들에 대한 요인 점수(factor scores)를 구하였다. 계산된 요인 점수들을 2개씩 짝지어 축으로 설정한 뒤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과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의 요인 점수를 그래프 상에 뿌려보았다.

---

7) 분석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두 보수 유권자 집단 간 이념구조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요인분석의 결과보다는 인자 적재량의 계수와 표준화된 원자료의 곱으로 계산되는 요인 점수를 구하여 그 요인 점수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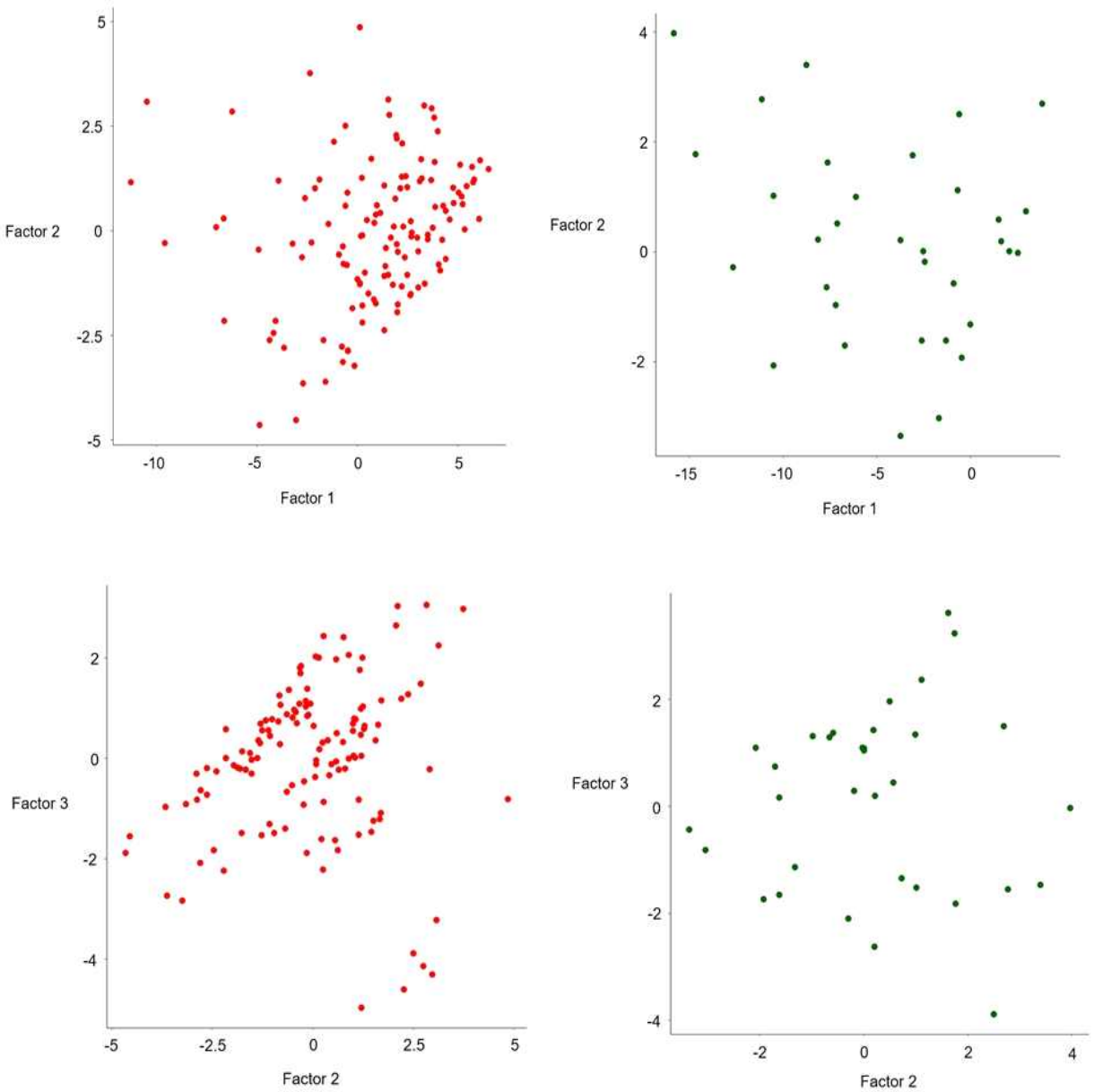


<그림 6> 보수 유권자 그룹 간 정책 태도의 분포 비교

이 때 정책 태도 점수가 커질수록 보수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요인에 대한 요인점수를 나타내는 x축과 y축 위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역시 보수적인 정책 선호를 갖는다고 해석된다. <그림 6>은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에 비해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의 정책 태도 분포가 보다 일차원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그래프에서 $a=1$인 일차함수 $y=ax$의 직선을 긋는다면 기성 보수 유권자 집단의 정책 태도는 그 직선을 중심으로 좁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 정책이슈에 대해 보수적인 정책 선호를 갖는다면 그와 비례하는 수준의 보수적인 태도를 다른 정책이슈에 대해서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의 분포는 훨씬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양상을 보인다. 아래의 <그림 7>은 <그림 6>에서 하나의 그래프 위에 나타난 두 유권자 그룹의 분포를 따로 나타낸 것이다. 두 그룹의 분포를 떼어놓고 보면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의 정책 태도는 좌표상에서 (0,0)을 기준으로 45° 를 이루는 직선을 그었을 경우 그 직선과 거리가 먼 관찰값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에 비해 이들이 갖고 있는 일련의 정책 태도들은 일관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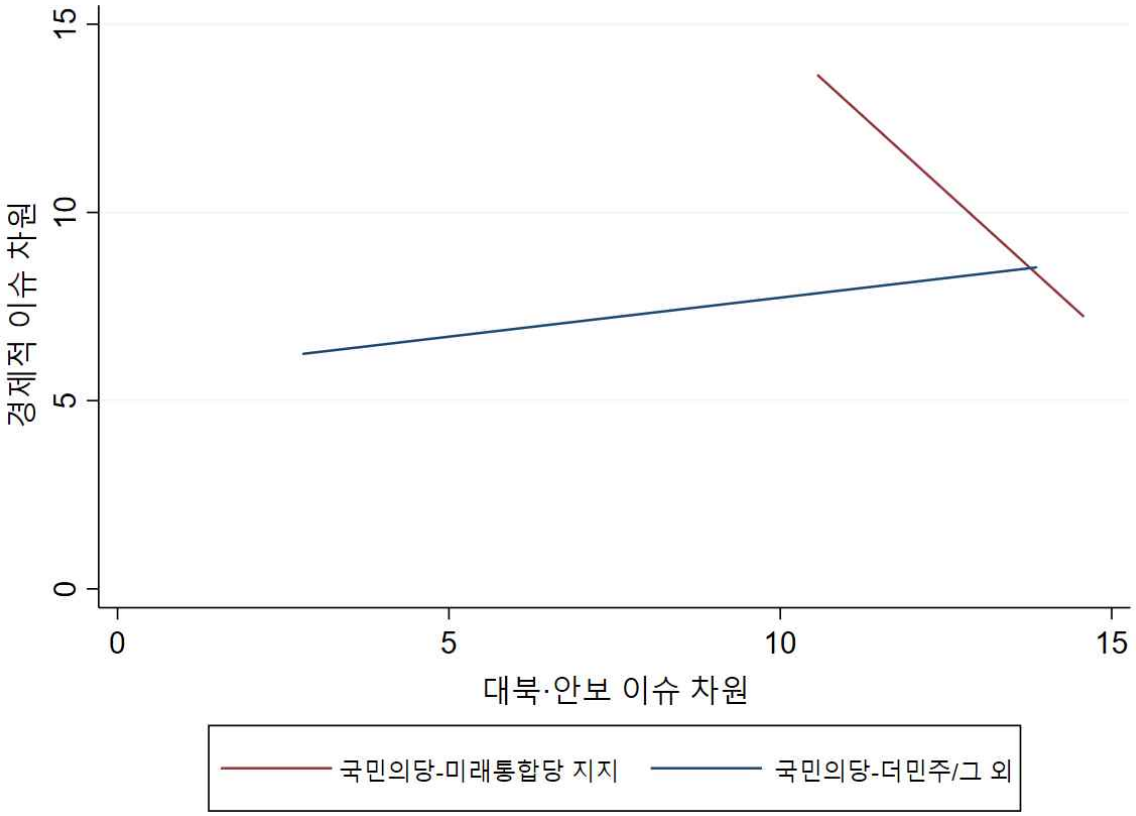
이렇듯 보수 유권자 집단 내 이념구조의 차원성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다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가진 분화된 유권자들 사이에서 2020년의 투표 선택을 결정지은 정책이슈는 무엇인가? 서로 다른 성격의 정책 태도들 중 어떤 것이 이들의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수행하여[8] 얻은 각 변수의 인자 적

8)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과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을 합친 다음 전체 보수 유권자들의 정책 태도 변수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들은 <부록 2>에 정리해두었다. 다만, <그림 6>의 근거가 되는 탐색적 요인분석 역시 동일하게 전체 보수 유권자들의 정책 태도 변수를 이용한 것이지만 <부록 1>과 <부록 2>에 정리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다소 다르다. 왜냐하면 <부록 1>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과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 간 이념구조의 차원성을 비교하



<그림 7> 보수 유권자 그룹별 정책 태도의 분포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 추출 방식, 요인 회전 유형, 요인 점수 계산 방법들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모델 중 가장 선명한 분포 차이를 보여주는 요인분석 모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록 1>과 <부록 2>의 요인분석 모형과 그 결과 역시 상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 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 분화된 유권자들의 2020년 비례대표 정당 선택과 이슈 차원

재량에 원자료의 정책 태도 점수를 곱하여 새로운 정책 태도 점수를 계산하였다. 그런 다음 경제적 차원과 대북·안보 차원에 각각 해당되는 정책이슈들에 대한 태도 점수들을 합하여 두 가지 이슈 차원에서의 쟁점 위치를 구하였다. 예를 들어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로서 경제적 이슈 요인(차원)에 변수 a와 변수 b가 적재되고 대북·안보 이슈 요인(차원)에 변수 c와 변수 d가 적재되었다면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의 쟁점위치는 [(변수 a×변수 a의 *CFAloading*)+(변수 b×변수 b의 *CFAloading*)]의 식에 따라, 대북·안보 이슈 차원에서의 쟁점위치는 [(변수 c×변수 c의 *CFAloading*)+(변수 d×변수 d의 *CFAloading*)]의 식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각 정책이슈 차원에서의 위치를 구하고 나서 <그림 8>과 같이

대북·안보 이슈 차원에서의 정책 태도가 한 단위 보수적으로 변할 때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의 정책 태도는 얼마나 보수적으로 변화하는지 그 변화량을 나타내는 회귀선을 추정하여 나타내었다. 이 회귀선은 대북·안보 이슈 차원에서의 쟁점위치를 독립변수로,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의 쟁점위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단순선형회귀 모델(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의 회귀식에 따라 그려진 것이다.

두 개의 회귀선은 2016년 국민의당을 지지했고 2020년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 집단, 2016년 국민의당을 지지했으면서 2020년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및 그 외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추정된 것이다. 그런데 가설 2-a와 2-b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집단은 국민의당-미래통합당 지지자들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자들이다. 국민의당-그 외 정당 지지자 집단을 가설에서의 국민의당-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으로 처리한 것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한 정당을 묻는 설문문항이 제시한 선지가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그 외 정당 5가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당-그 외 정당 지지자 집단과 국민의당-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16년 국민의당을 지지한 응답자들을 놓고 봤을 때 2020년 시점에서 지지하는 정당으로 국민의당을 선택한 응답자들 90%가 2020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그 외 정당'을 지지했다고 답했음을 고려한다면 국민의당-그 외 정당 지지자 집단을 국민의당-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으로 간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8>에서 먼저 국민의당-더민주/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을 살펴보면 대북·안보 이슈 차원 상에서 이 집단 내 유권자들의 쟁점위치 차이, 즉 정책 태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의 정책 태도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다. 대북·안보 이슈 차원의 축에서 쟁점위치의 범위는 [2.805371, 13.8613] 인 반면 경제적 이슈 차원의 축에서 범위는 [6.24423, 8.53838]이다. 그러므로 대북 이슈에 대한 태

도의 차이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투표 선택을 한 유권자 그룹으로 묶여진다는 것은 곧 이들이 투표 결정을 내릴 때 대북·통일 이슈보다 경제적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경제 이슈 차원에서의 정책 선호가 정치적 선택에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대조적으로 국민의당-미래통합당 지지자 집단은 대북·안보 차원보다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 의견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두 축에서의 쟁점위치 범위를 확인해본 결과 대북 이슈 차원에서는 [10.5702, 14.5701]의 범위를, 경제적 차원에서는 [7.246, 13.639]의 범위를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국민의당-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집단 내 정책 태도의 차이가 작은 대북·안보 이슈가 더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당-더민주/국민의당 지지자 집단과 비교한다면 쟁점위치의 범위는 두 가지 정책이슈 차원 중 어느 한 쪽에서 월등하게 넓지는 않다.

그러므로 2016년에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 중 경제 이슈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을, 대북 이슈를 더 중요한 이슈로 인식할수록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0년 총선에서 서로 다른 정당을 선택한 두 집단을 직접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정책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6>은 두 이슈 차원에서의 쟁점위치 차이를 t-test 검정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우선 두 집단 간 쟁점위치의 차이는 대북 이슈 차원과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하지만 경제적 차원에서 집단 간 정책 태도 차이의 p-value가 0.01에 가까운 값을 갖는 반면 대북·안보 차원에서는 0.05에 근접한 값인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분화된 유권자들 사이에 경제적 이슈에 대한 입장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집단 사이 쟁점위치 평균의 차이 역시 대북·안보 차원에서는 2.727이지만 경제

적 차원의 경우 3.502로서 그러한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6> 2020 총선 투표 정당에 따른 집단별 쟁점위치

2016-2020 총선	대북·안보 차원	경제적 차원
국민의당-미래통합당	12.092	11.253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9.365	7.751
	Pr=0.0435	Pr=0.0117

이렇듯 2016년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슈(issue salience)에 대한 정책 선호를 근거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게 투표하였지만 그럼에도 이런 선택은 대안으로서 미래통합당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2020년 총선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국가주의 보수 내지는 전통적인 안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은 2020년 총선에서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념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거리가 멀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표 7>은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과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 사이에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 및 정당 호감도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 중 하나로 평가받는 유권자와 정당 간 이념적 거리, 그리고 정당에 대한 호감도 측면에서 2016년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보다 미래통합당과 이념적으로 약 2.43배 정도 더 멀다고 인식했으며, 해당 정당에 대한 호감도 역시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일부가 미래통합당에게 표를 준 것은 정책이슈의 축들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정책 선호, 그리고 그 정책 선호들로 설명되는 정치이념이 2020년 총선에서의 대안적 선택에 더 강력한 영향

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절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식에 통제변수로서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 등을 포함시켜 분석해봄으로써 이러한 해석을 재확인해보고자 한다.

<표 7> 미래통합당과의 이념적 거리 및 정당 호감도

	이념적 거리	정당 호감도
2016 새누리당-2020 미래통합당 지지자	1.6107	6.5197
2016 국민의당 지지자	3.9268	3.2326
ANOVA	N=190 F=55.69 p<0.0000	N=195 F=83.25 p<0.0000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2016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에게 투표한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은 여러 정책이슈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일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2016년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화된 유권자 그룹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정책적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이념구조를 갖고 있었다. 한편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을 대표해줄 제3의 정당이 사라진 2020년 총선에서 이들은 대북 이슈의 차원과 경제적 이슈 차원 중 경제적 이슈 차원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을 지지한 반면 대북·안보 이슈 차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을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슈에 대한 쟁점위치를 기준으로 자신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3 절 다차원적 이념구조와 투표 선택

앞서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에 이어 2020년에도 새누리당을 계승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기성 보수 유권자들과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은 이념구조의 차원성에서 질적으로 다른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전체 보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이념이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2020년 총선에서 선택한 정당이 달라졌는지 그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모형식을 따라 종속변수는 미래통합당 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9]에 대한 지지이며 독립변수는 경제적 차원에 포함되는 이슈들에 대한 정책 태도와 대북·안보 차원에 해당되는 이슈들에 대한 정책 태도 간 차이의 절댓값, 즉 정책 태도의 차원성이다. 통제변수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함께 유권자의 주관적인 이념성향, 정당일체감을 설정하였다. 특히 정당일체감 변수는 이념투표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해보았다. 본 연구는 설정한 모형이 사건 발생의 유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는 여러 가지 검정 방식들 가운데 호스머-래머쇼(Hosmer-Lemeshow) 통계량과 ROC 곡선을 선택하였다. 특히 호스머-래머쇼 통계량은 연속형 변수가 독립변수일 경우 주로 사용되는 적합도 검정 방식이며 예측빈도와 관찰빈도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큰 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길곤 2018). <표 8>에서 귀무가설은 '관찰빈도와 예측빈도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인데 p-value 값이 0.2605이므로 귀무가설을

9) 4장 1절에서 설명되었듯이 2016년에 국민의당을 지지했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2020년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그 외 정당' 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들과 2020년에 지지하는 정당이 국민의당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의 실제 라벨은 국민의당이 아닌 '그 외 정당' 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결과 해석 시 '그 외 정당' 에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들을 곧 국민의당을 선택한 투표자로 간주하였다.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 모형은 '2020년 총선에서의 미래통합당 지지'라는 사건의 발생 유무를 제대로 예측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ROC 곡선은 <그림 9>가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이 0.9 이상이면 모형의 예측력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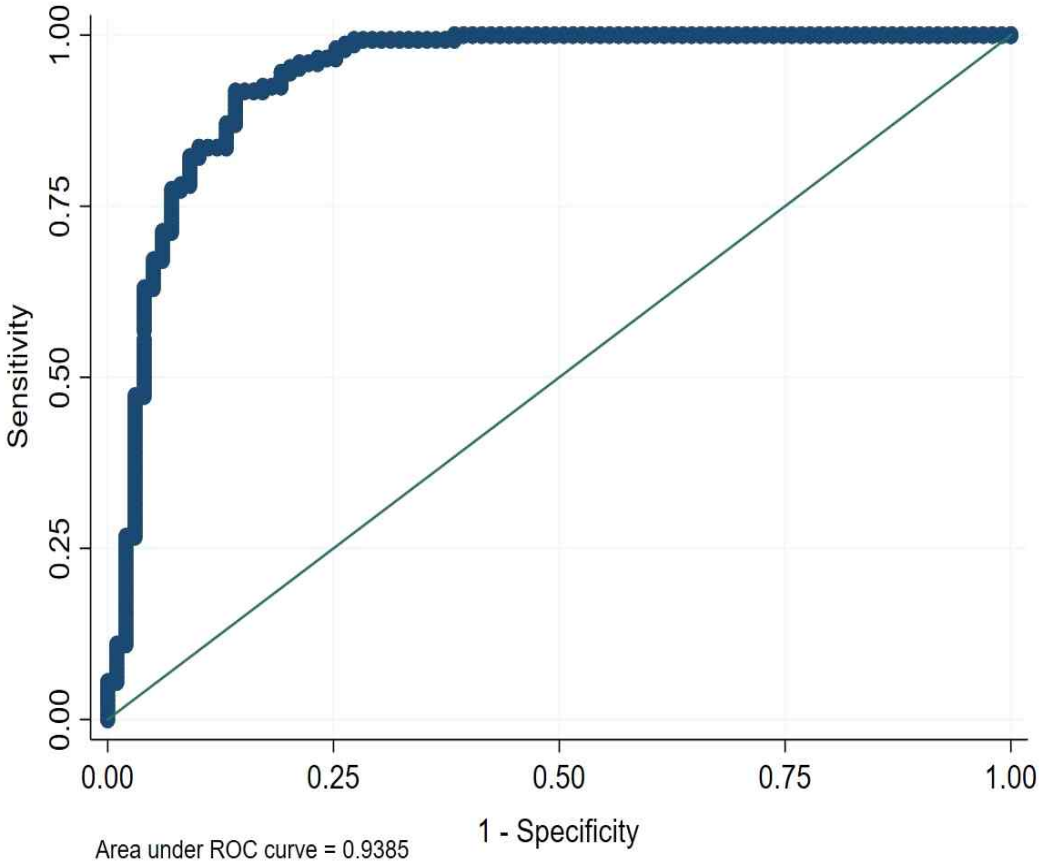
<표 8> 호스머-래머쇼(HL) 통계량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

Group	Total	사건발생=1(Y=1)		사건발생=0(Y=0)		Prob
		Obs	Exp	Obs	Exp	
1	25	0	0.0	25	25.0	0.0048
2	24	0	0.4	24	23.6	0.0324
3	25	2	2.4	23	22.6	0.2200
4	24	11	11.4	13	12.6	0.6837
5	25	19	18.5	6	6.5	0.8078
6	24	21	20.4	3	3.6	0.8811
7	25	24	22.5	1	2.5	0.9208
8	24	23	22.5	1	1.5	0.9550
9	25	24	24.1	1	0.9	0.9747
10	24	22	23.7	2	0.3	0.9963

N=245 number of groups= 10

Hosmer-Lemeshow chi^2= 10.06

Pr > Chi^2= 0.2605



<그림 9>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ROC 곡선

림 9>에서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은 0.9385로서 모형적합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적합도 검정 결과를 봤을 때 본 연구의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의 예측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설정한 모형식에 기반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2020년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는가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이념구조의 차원성, 미래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남성,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이었다. 즉 보수 유권자들 중 정치이념이 다차원

<표 9>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념구조의 차원성에 따른 투표 선택

		계수(표준오차)	오즈비
이념구조의 차원성		-2.98(1.26)*	0.05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1)	보수	0.67(0.95)	1.96
	중도	1.52(1.02)	4.60
정당일체감 (더불어민주당=1)	미래통합당	6.64(1.36)**	769.02
	국민의당	1.43(1.34)	4.21
	그 외	1.67(1.46)	5.33
성별 (남자=1)		1.27(0.51)*	3.56
연령 (20대=1)	30대	0.39(1.23)	1.48
	40대	1.93(1.25)	6.95
	50대	1.81(0.99)	6.15
	60대 이상	1.16(0.91)	3.20
소득 (200만원 미만=1)	200~300만원	-0.31(0.83)	0.73
	300~400만원	-1.11(0.73)	0.32
	400~500만원	-1.33(0.86)	0.26
	500만원 이상	-1.92(0.72)**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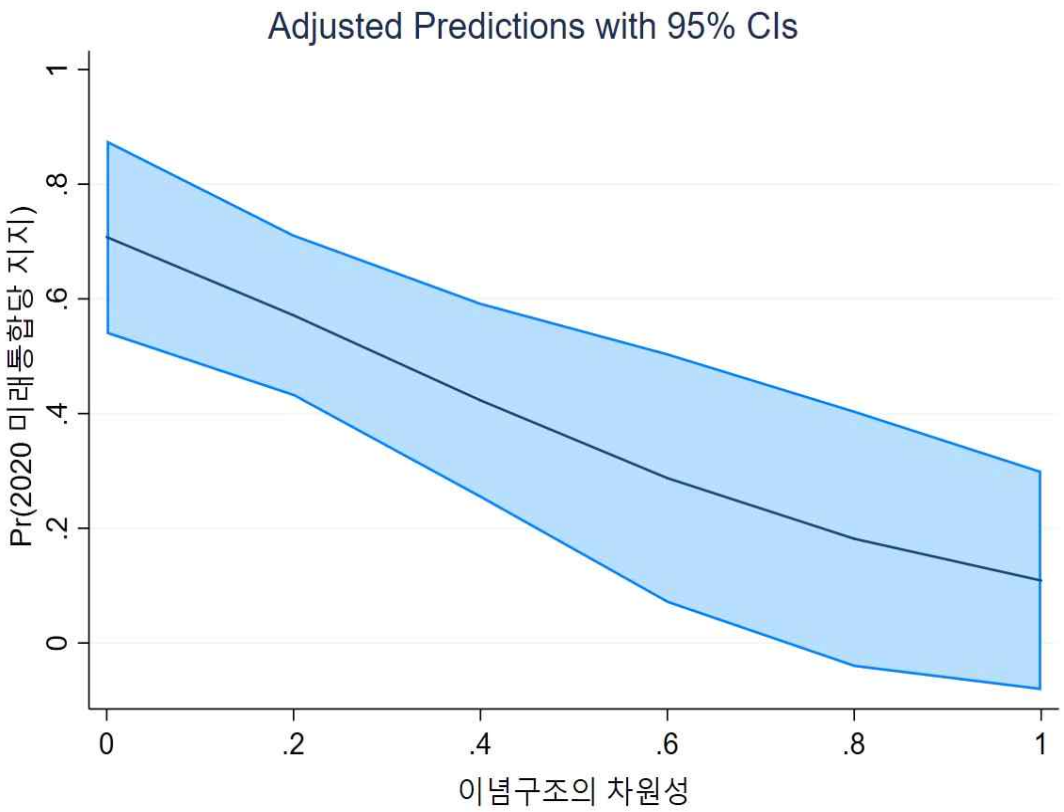
학력 (중졸 이하=1)	고졸	0.49(1.09)	1.64
	대졸	1.69(1.19)	5.43
	대학원 이상	-1.02(1.42)	0.35
지역 (서울=1)	경기/인천	1.07(0.77)	2.93
	부산/울산/경남	0.99(0.82)	2.71
	대구/경북	1.67(0.85)	5.35
	광주/전라	1.51(1.53)	4.56
	대전/충청/세종	0.42(0.96)	1.53
	강원/제주	2.07(1.55)	7.98
상수		-7.27(2.30)**	
N=245			
Cox-Snell R^2=0.545			

*p<0.05 **p<0.01

적인 구조를 띄고 있을수록 미래통합당보다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에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준 범주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과 비교했을 때 미래통합당에 대해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일수록, 남성일수록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소득 계층일수록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림 10>은 분석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이념구조의 차원성에 따라 미래통합당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계효과

(marginal effect)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른 변수들의 값은 기준 범주에 고정한 다음 한계효과를 측정하였다. 한계효과의 개념을 이용하면 오즈비를 통해 회귀계수를 해석할 때보다 독립변수의 크기 변화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념구조가 가장 다차원적일 때 미래통합당에게 투표할 확률은 경제적 차원과 대북·안보 차원에서의 평균적인 쟁점위치가 가장 일치할 때 미래통합당에게 투표할 확률의 0.15배이다.



<그림 10> 이념구조 차원성 변수의 한계효과와 신뢰구간

이념구조의 차원성이 설득이나 투사 효과를 야기하는 정당일체감을 포함시킨 모형에서도 미래통합당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점은 정확한 이슈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좌-우 또는 보수주의-자유주

의의 신념체계를 따라 유권자의 정책 선호들이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는 1차원 모델의 관점을 반박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투표 결정 요인보다 선행하는 인지적 스크린(perceptual screen)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는 정당일체감과 비교하더라도 이념구조의 차원성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이 합리적 유권자로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에 대한 정당일체감과 달리 국민의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화된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가 장시간 형성된 심리적 애착(Campbell et al. 1960)이나 정서적 호감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6년과 2020년에 모두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에 비해 이들의 정치적 선택은 정당과의 이념적·정책적 거리, 여러 정책적 차원에서 비일관적인 유권자 자신의 쟁점 위치 등을 더 많이 고려함으로써 인지적, 합리적 투표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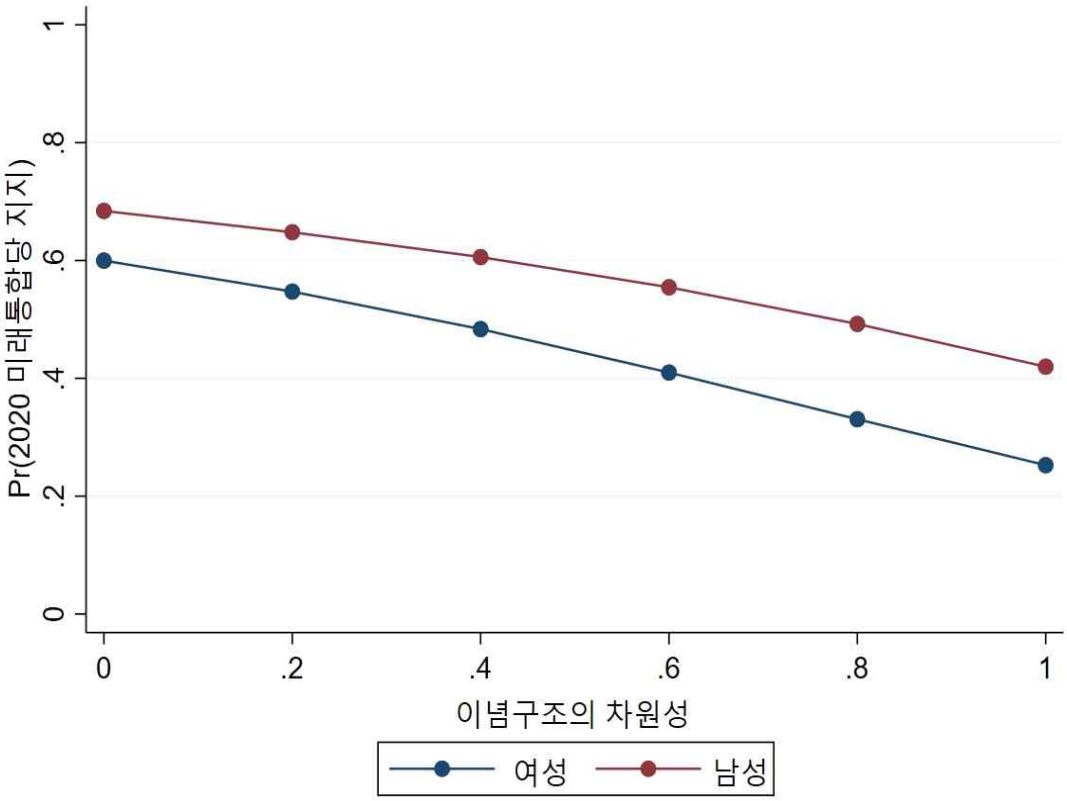
주관적 이념성향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이슈에 대한 태도로 측정되는 정치이념이 주관적 이념성향보다 이념구조를 파악하는 데 타당성(validity)이 보다 확보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일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가진 유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념성향을 평가한다면 정책 태도들로 집약되는 이념과 주관적 이념성향 사이에 간극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차원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라면 단순히 보수-진보의 스펙트럼 상에서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평가하는 것만으로 이들의 정치이념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념구조의 차원성과 달리 주관적 이념성향이 2020년 총선에서의 지지 정당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성향만으로 이념구조의 다차원성을 파악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한정훈 2016).

한편 교육 수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라는 결과는 다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단순히 정치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당 및 후보자의 쟁점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은 정책 선호를 보인다는 주장 역시 거부한다. 학력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을 구성하는 정책적 차원의 개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학력과 이념구조 차원성 간 상관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는 0.0123이었으며 p-value 값은 0.8268이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유권자들은 적은 수의 정책 차원만으로 자신의 정치이념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스팀슨(Stimson 1975)의 일차원적 이념구조 모델은 2020년 총선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이념투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소득과 성별이다. 성별 변수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더 높다. <그림 11>은 이런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성별에 따라 다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가진 유권자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확률이 어느 정도로 감소하는지를 시각화한 그래프이다. 여성은 경제적 이슈 차원과 대북·안보 이슈 차원에서의 쟁점 위치가 일치할 때, 즉 이념이 가장 일차원적인 구조를 가질 때조차 미래통합당에게 투표할 확률이 같은 조건 하에서 남성이 미래통합당에게 투표할 확률의 0.87배이다. 또한 두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책 태도가 가장 일관적인 경우와 가장 비일관적인 경우를 비교한다면 남성 유권자들보다 여성 유권자들의 다차원적 이념구조가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 여부에 더욱 민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만약 남성보다 여성이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슈에 대해 기성 보수정당과의 이념적 거리가 훨씬 멀다면 <그림 1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 차원에 포함되는 젠더 이슈는 최근 몇 년 간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상당한 폭발력을 갖는 이슈로 성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총선 선거운동



<그림 11> 이념구조에 따른 미래통합당 투표 확률: 성별 비교

기간 당시 논란이 되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n번방 호기심 회원' 발언을 비롯해 소속 정치인들의 다수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설령 다른 정책적 차원에서는 미래통합당과의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그 어떤 이슈보다 젠더 이슈에 민감한 2030대 여성들이 미래통합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확률에 대한 성별의 차이 역시 다차원적 이념구조 상에서 이슈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지는 투표 결정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분석결과 요약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6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2020년에도 새누리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을 선택한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진보로 정의되는 단 하나의 차원만으로 구성된 정치이념을 갖고 있다. 반면 2016년에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대북·안보 이슈의 차원과 경제적 이슈의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성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은 서로 다른 정책이슈의 차원에서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전통적인 일차원적 이념구조 모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정책 태도들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정치이념은 단일한 신념체계로부터 완벽하게 제한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책 태도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규정 가능한 일련의 정치이념을 구성할 수 있다.

둘째, 2016년 총선과 달리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해줄 수 있는 제3의 보수 정당이 사라진 2020년 총선에서 이들은 2개의 정책적 차원들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무엇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였다. 대북·안보 이슈를 더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을 지지한 반면 경제적 이슈가 보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다. 2016년과 2020년에 국민의당-미래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 집단과 달리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자 집단은 대북·안보 이슈 차원 상에서 정책적 입장 차이가 경제적 이슈 차원에서보다 훨씬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 번의 연속

적인 선거에서 동일한 투표 선택을 한 것은 그만큼 경제적 이슈가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자 집단 내부에서 현저한 이슈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분화된 보수 유권자들은 양당 대결 구도의 2020년 총선에서 불가피하게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대안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정당이었든 간에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래통합당에 대해 이념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모두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때 중도 보수 성향의 제3정당을 지지했음에도 같은 보수 진영에 속하는 미래통합당과 어느 측면에서도 가깝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오랜만에 진영 대결의 양상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2020년 총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이전에 이미 이탈한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여전히 되돌리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떤 원인에서 연유한 것인지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넷째, 기성 보수 유권자 그룹과 분화된 보수 유권자 그룹 모두를 상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차원과 대북·안보 차원에서의 평균적인 쟁점위치 간 차이가 없을수록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확률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을 지지할 확률보다 더 컸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가지 정책 차원에서의 쟁점위치 간 거리가 멀수록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확률은 감소했다. 그러므로 앞선 요인분석에서 확인했던 보수 유권자들 간의 이념구조 차이가 결과적으로 2020년 총선에서 기성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2016년 총선 이후 네 차례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당의 연속적인 패배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당체계의 재편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제각기 다르지만 보통 재편성 개념에서 핵심은 '유권자와 정당 간 연합구도의 해체 및 변동'이다. 따라서 2016년 총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보수 세력의 분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편성의 개념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비록 정당 체계의 수준에서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다시 양당제로 돌아감에 따라 겉보기에 재편성의 흐름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유권자 수준에서는 보수의 분화와 연계되어 있는 다당제 지향성이 2020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향후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하여 다당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제도를 내놓는다면 제도의 영향으로 얼마든지 제3의 보수 정당은 재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21대 총선에서 허공에 떠버린 채 부유하던 보수 유권자들은 다시 제3당으로 그들의 지지를 안착시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선거 제도 이외에도 보수의 분열로 촉발된 재편성이 계속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17년 대선을 거치며 이념적 스펙트럼 상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가장 좁은 범위의 유권자들을 주요 지지층으로 두게 된 미래통합당이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그보다 훨씬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보수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탄핵 정국을 경험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탄핵에 대해 합의된 입장이 도출된 적이 없으며 소위 태극기부대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기존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의 정책적 입장을 대표하기란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수 유권자의 이념적 분열과 그에 따른 보수 정당의 쇠퇴가 최종적으로 재편성으로 귀결될 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와 지속성을 보이는 보수의 분화는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당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논문의 연구는 그동안 한국의 정치이념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이념구조의 개념을 갖고서 이념구조의 차원성에 따라 정치적 선택이 달라지는지 밝혀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정치이념 연구는 주로 이념이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면서 유권자가 직접 평가한 주관적 이념성향에 따라 지지정당이 달라진다거나 혹은 지지 정당별로 정책이슈에 대해 유의미한 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을 거치며 가시적으로 드러난 보수 유권자들의 분화 역시 그들 사이에 이념적 위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개별 정책이슈들에 대해 이슈 태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왜 일부 유권자들이 기성 보수정당으로부터 이탈한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의 정책태도들을 묶어서 요약해주는 상위 개념, 즉 정책이슈 차원이 몇 개인지를 분석하여 보수 유권자들의 이념구조가 얼마나 이질적인지 밝혀낸 다음 한 발 더 나아가 이념구조의 차원성에 따라 2020년 총선에서의 투표 결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2010년대 이후 점차 다원화되는 이슈들과 함께 다차원적인 정책 선호를 바탕으로 이념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와 그에 따른 선거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은 다차원적인 이념구조를 갖는 유권자들이 정책・이념투표를 할 때 복수의 정책 차원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슈에 대한 쟁점위치를 기준으로 지지 정당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일차원적인 이념 공간을 상정하는 근접성 모델의 뚜렷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패널 자료(panel data)를 활용하여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보수 유권자

들의 이념적 분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차원적인 정책선호 상에서 어떠한 정책적 차원이 더 진보적으로 변화하였는지, 대북·안보 이슈 차원, 경제적 이슈 차원 그리고 사회적 이슈 차원에서의 정책 태도 간 음(-)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패널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에서 치러진 선거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 사후(post-election) 서베이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설문문항들 중 동성애, 젠더, 소수자 차별금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등 권위주의-자유주의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정책 태도를 묻는 설문문항이 부족했다는 점, 응답자에게 선거 시점에서 현저한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직접적으로 묻는 설문문항이 부재했다는 점으로 인해 가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념을 구성하는 차원들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정책이슈들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이나 응답자에게 중요한 이슈의 순위를 직접 매기도록 하는 문항과 같이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설문문항들이 다수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수 대 진보의 단순한 스펙트럼 위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이념을 측정하는 연구를 뛰어넘어 그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이념과 투표 행태 간에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원택. 2003.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2(1), 5-30.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 · 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강원택. 2008. “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 『현대정치연구』 1(2), 75-102.

강원택. 2010. 『한국 선거 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나남, 제7장.

강원택. 2017.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한국정당학회보』 16(2), 5-33.

강원택 · 성예진. 2018.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7(1), 205-240.

고길곤. 2018.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제2판. 문우사.

길정아 · 하상응.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56(0), 46-78.

김무경 · 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2), 6-31.

김일영. 2004. “17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체계 재편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32, 365-383.

김주찬 · 윤성이. 2003.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세기 정치학회보』 13(2), 1-16.

류재성. 2013. “정치 이념의 방향, 강도 및 층위.” 『한국정당학회보』 12(1), 61-86.

박경미 · 한정택 · 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1(3), 127-154.

박원호. 201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 그리고 후보자 선택.” 박찬욱・강원택 편.『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서울: 나남.

박원호・신화용. 2014.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48(5), 119-142.

박원호. 2020, 4.17. “코로나 속 국가의 재발견, 그게 수퍼여당 만들었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56396

송진미. 2019. “보수정당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 2012-2017년 대선 패널 데이터 분석.” 『한국정치연구』28(1), 109-146.

송진미・박원호. 2016. “이슈경쟁과 합의이슈모델: 2014년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15(1), 29-61.

오현주・송진미・길정아・강원택. 2014. “정당 호감도와 회고적 평가: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13(3), 69-97.

이갑윤・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1(1), 137-166.

이내영. 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17(2), 42-72.

이내영・고승연. 2016. “제20대 총선의 정당지지 변동 분석: 국민의당의 약진과 여소야대의 원인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거 Ⅶ』, 서울: 오름.

이내영・정한울. 2007.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의 변동.” 『한국정치학회보』41(1), 31-55.

이정진. 2007. “재편성 개념으로 분석한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28(2), 109-138.

이준한・임경훈. 2004. “과연 중대선거인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연구』13(2), 117-141.

이현출. 2005. “한국 국민의 이념성향: 특성과 변화.” 『한국정치학회보』39(2), 321-343.

임지선. 2012, 4.16. “‘이런 보수는 처음…’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통

합당.”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161143001
장승진. 2016. “제20대 총선의 투표선택: 회고적 투표와 세 가지 심판론.” 『한국정치학회보』 50(4), 151-169.
장승진. 2018. “2012-2017 보수 유권자의 분화: 과연 운동장은 (거꾸로) 기울었는가?.” 『의정연구』 55(0), 30-54.
전슬기. 2017, 2.27. “유승민 “안철수와 ‘안보는 보수・경제는 진보’ 철학은 비슷” ”. 조선비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2381.html
조성대. 2015. 『이념의 정치와 한국의 선거: 공간이론으로 본 한국의 대통령선거』, 서울: 오름.
천관율. 2017, 5.8. “3년만 참으면 보수가 살아난다?.”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10
천관율. 2020, 4.27. “드디어 진보는 다수파가 되었나.”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6
최효노. 2018. “한국 유권자의 이슈태도: 경제 및 복지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미분화와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한국정당학회보』 17(4), 121-150.
한정훈. 2016.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0(4), 105-126.
현재호. 2008.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갈등: 정치적 대표체제로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4), 213-241.

Angus Campbell,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s. New York: John Willey and Sons.
Bakker, R., Jolly, S. & Polk, J. 2018. “Multidimensional incongruence and vote switching in Europe.” *Public Choice* 176(1): 267-296.
Brody, Richard. and Benjamin Page. 1972.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2): 450-458.

Carsey, Thomas and Geoffrey Layman. 2006. "Changing Sides or Changing Minds? Party Identification and Policy Preferences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2): 464-477.

Conover, Pamela Johnston and Stanley Feldman. 1981. "The Origins and Meaning of Liberal/Conservative Self-Id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617-645.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Low.

Ellis, C. and J. A. Stimson (2009). "Symbolic ideology in the American electorate." *Electoral Studies* 28(3): 388-402.

Feldman, S. 1988. "Structure and Consistency in Public Opinion: the Role of Core Beliefs and Valu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2): 416-440.

Fleishman, J. A. 1988. "Attitude Organization in the General Public: Evidence for a Bidimensional Structure." *Social Forces* 67(1): 159-184.

Geoffrey Evans, Anthony Heath and Mansur Lalljee. 1996. "Measuring Left-Right and Libertarian-Authoritarian Values in the British Electorat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1): 93-112.

Giger, N. and Lefkofridi, Z. 2014. "Salience-Based Congruence Between Parties & their Voters: The Swiss Case."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0(2): 287-304.

Hong, G. 2015. "Explaining vote switching to niche parties in the 200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European Union Politics* 16(4): 514-535.

Kang, Won-Taek. 2004. "Protest Voting and Abstention under Plurality Rule Elections: An Alternative Public Choice Approach."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6(1): 79-102.

Kim, Do-Won. 2018. "Changes in dimensionality, party competition and voter preference in the era of populism: The case of England, 2010-2017." [Master's thesi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Krosnick, J. 1990. "Government Policy and Citizen Passion: A Study of Issue Publics in Contemporary America." *Political Behavior* 12(1): 59-92.

Lavine, H., J. Sullivan, E. Borgida and C. Thomson. 1996.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and Personal Issue Salience to Attitude Accessibility on Foreign and Domestic Policy Issues." *Political Psychology* 17(2): 293-316.

Lefkofridi, Z., Wagner, M.,& Willmann, J. E. 2014. "Left-authoritarians and policy representation in western Europe: electoral choice across ideological dimensions." *West European Politics* 37(1): 65-90.

Letivin, Teresa E., and Warren E. Miller. 1979.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f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September 1979): 751-771.

Marcus, George., David Tabb, and John L. Sullivan. 1974. "The applic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scaling to the measurement of political ideolog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November 1977): 745-768.

Nie, N. H. and K. Andersen. 1974. "Mass Belief Systems Revisited:

Political Change and Attitude Structure." *The Journal of Politics* 36(3): 540-591.

Nie, N. H., S. Verba, and J. R. Patrocik. 1976. The Changing American Vo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O' Rourke, N. and L. Hatcher. 2013. A Step-by-Step Approach to Using SAS for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2nd ed.). Cary, NC: SAS Institute Inc.

Stimson, J. A. 1975. "Belief Systems: Constraint, Complexity, and the 1972 Ele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3): 393-417.

Treier, Shawn and Sunshine Hillygus. 2009. "The Nature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Contemporary Electorate." *Public Opinion Quarterly* 73(4): 679-703.

Weisberg, Herbert F. and Jerrold G. Rusk. 1970. "Dimension of candidate evalu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December 1970): 1167-1185.

Wyckoff, M. L. 1980. "Belief System Constraint and Policy Voting: A Test of the Unidimensional Consistency Model. " *Political Behavior* 2(2): 115-146.

부 록

부록 1 탐색적 요인분석(1)의 결과

변수	성분			공통성
	요인 1	요인 2	요인 3	
복지를 위한 지출 확대	0.73	0.46	0.29	0.82
빈부격차 해결책으로서 증세	0.47	0.19	0.03	0.26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 정책 추진	0.77	0.51	0.14	0.86
대북 강경책	0.56	-0.41	-0.40	0.64
국방비 예산 증대	0.47	-0.24	-0.29	0.36
북한과의 대화 협상	0.72	-0.37	-0.32	0.77
복지보다 성장 우선	0.73	0.26	0.27	0.68
대기업 규제 완화	0.68	0.04	0.12	0.47
남북 교류 협력	0.71	-0.21	-0.22	0.59
한미 동맹	0.75	-0.06	-0.12	0.58
보편적 복지	0.23	0.58	-0.29	0.48
사회적 질서 대 개인의 자유	-0.29	-0.10	0.62	0.48
적폐 청산	0.64	-0.61	0.75	1.34
고유값(eigenvalue)	4.99	1.71	1.63	

*추출방법: 주요인법(principal factor method)

부록 2 탐색적 요인분석(2) 및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EFA) 결과

변수	성분			공통성
	요인 1	요인 2	요인 3	
복지를 위한 지출 확대	0.91	0.06	-0.00	0.83
빈부격차 해결책으로서 증세	0.56	0.16	-0.13	0.36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 정책 추진	0.89	0.13	-0.15	0.84
대북 강경책	0.02	0.84	-0.00	0.71
국방비 예산 증대	0.08	0.70	-0.04	0.50
북한과의 대화 협상	0.22	0.84	0.05	0.77
복지보다 성장 우선	0.83	0.17	0.12	0.75
대기업 규제 완화	0.64	0.35	0.19	0.57
남북 교류 협력	0.34	0.72	0.05	0.65
한미 동맹	0.50	0.61	0.02	0.64
보편적 복지	0.42	-0.05	-0.74	0.73
사회적 질서 대 개인의 자유	-0.01	-0.50	0.69	0.73
적폐 청산	0.41	0.33	0.80	0.92
고유값(eigenvalue)	3.85	3.42	1.78	

*추출방법: 주요인법(principal factor method **회전방법: 베리멕스

2.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변수	요인	
	Economic	Security
복지를 위한 지출 확대	1(constrained)**	
빈부격차 해결책으로서 증세	0.64(0.09)**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 정책 추진	1.10(0.08)**	
대북 강경책		1(constrained)**
국방비 예산 증대		0.70(0.11)**
북한과의 대화 협상		1.09(0.12)**
복지보다 성장 우선	0.29(0.03)**	
대기업 규제 완화	0.14(0.02)**	
남북 교류 협력		0.32(0.04)**
한미 동맹		0.21(0.03)**
보편적 복지	0.16(0.03)**	
사회적 질서 대 개인의 자유		
적폐 청산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Abstract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Differentiation among Conservative Voters:

The 2020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South Korea

Park, Jeong-Eu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fferentiation among conservative voters and show that division of them was affected not only by difference in ideological propensity, but by ideological structure composed of policy preferences for various issues.

Results show that voters who supported Saenuri Party in 2016 Election and United Future Party in 2020 National Assembly Election have unidimensional structure, while supporters of People's Party in 2016 Election have multidimensional structure comprised of national security

dimension and economic dimension. Thus conflicting issue attitudes are found in voter group whose political ideology has multidimensionality. Specifically their issue position on national security is similar to Saenuri Party-United Future Party supporters' , whereas position on economy is more liberal. Depending on their salient issues, they vote different parties as alternatives of the third party which they have supported since 2016. When people think security issues are more important, they vote for United Future Party. On the other hand when people think economic issues are more important, they vote for Democratic Party or People's Party in the 2020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article finds that the number of dimensions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arty choice in 2020. multidimensionality exerts strong influence on casting a ballot for Democratic Party or People's Party, not for United Future Party. It suggests that division of conservative voters based on difference in ideological structure could be starting point for realignment.

Keywords : Differentiation among Conservative Voters, Multidimensional Structure, Issue Attitude, Policy Preference, Realignment, Factor Analysis

Student Number : 2018-21715